

이집트 혁명 1주년
발전하는 혁명과 계급의식

▶ 3, 8~9 면

반제국주의
미국은 왜
이란을 압박하는가

▶ 6 면

진보의 대안 논쟁
통합진보당은 어디로

▶ 4 면

KTX 민영화
파괴되는 99퍼센트의 삶

▶ 11 면

〈부러진 화살〉
추악한 사법 권력

▶ 12 면

발행인_최성호 편집인_최성호
인쇄인_(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서울다08179 (격주2)
등록연월일_2009년 1월 12일
주소_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02-777-2792 팩스_02-777-0211
제보_02-777-2791 E-mail_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06

Left21.com

제74호 | 2012년 2월 4일 ~ 2월 17일 | 값 1,800원

레프트21

구역질 난다 박근혜 ‘쇄신’ 사기극 저들의 위기 탈출을 막아라!

이명박 친인척과 측근들의 비리가 계속해서 터져 나오고 있다. 최시중이 ‘쇼팽백’으로 돈을 뿌린 혐의를 받다가 물러나더니, 이제는 왕차관 박영준과 외교부가 연루된 CNK 사건이 엄청난 악취를 풍긴다. 사실 이명박 정부가 그동안 추진한 1퍼센트만을 위한 정책이야말로 합법적 정경유착과 부패라 할 만하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10대 재벌의 유보이익은 3백조 원을 넘었고, 이명박 본인도 종부세 감면으로 90퍼센트나 세금이 깎일 지경이다. 이명박은 자기 친척과 친구들인 1퍼센트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며, 그 과정에서 온갖 비리도 저지른 것이다. 반대로 이명박 정권의 살인 진압에 시달린 쌍용차 노

동자와 가족들은 벌써 20명이 정리해고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났다.

따라서 이제 와서 이명박 정부가 재벌 때리기 시늉을 하는 것은 역겨울 뿐이다. 물론 그 뒤에서 이명박은 99퍼센트 민중을 고통에 빠뜨릴 한미FTA 발효를 준비한다. 따라서 부패한 1퍼센트만을 위한 범죄 정부는 진작 물러났어야 마땅하고, 한나라당은 해체돼야 했다.

그리고 이 정권은 이미 몇 달 전부터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 한미FTA 날치기 강행 이후 거센 저항에 시달리다가 디도스까지 밝혀지자 정신없이 휘청거렸다. 뒤이어 탈당 소동도 일어났고, 돈봉투 사건까지 터져 나왔다.

박근혜가 조기 등판한 것은 이런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였다. 박근혜의 임무는 집권당을 향한 대중적 분노에 물타기를 하며 시간을 버는 것이었다.

사실 박근혜의 앞 길은 험준한중이었다. 한나라당이 해체 위기를 벗어나려면 공공의 적이 된 이명박과 차별화해야 하는데, 그러면 우파의 분열이 가속화할 것이다. 그래서 박근혜는 비대위 내부 강경파들의 ‘정권 실세 용퇴·탈당론’과 거리를 뒀다.

대신 박근혜는 포장지만 바꾸려 한다. 당명 변경과 당 정강·정책 개정이 그것이다. 그러나 이런 사기극으로 부패한 친미 우익이며 1퍼센트만을 대변하는 한나라당의 본질이 바뀔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는가. 그런데도 박근혜의 ‘쇄신’이 계속 주목 받는

것은 사실이다.

이것은 기성 언론과 권력자들이 합심해서 정치 위기 봉합과 자본가 양당 구도 복원에 주력한 덕분이다. 민주당도 일조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비대위 출범 후 곧 국회로 등원해 정부가 한미FTA 발효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왔고, 이어서 미디어랩, 석패율제 등에서 줄줄이 한나라당과 합의하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안철수 현상 등을 견제하며 양당 구도를 복원하는 것에 민주당도 이해관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반한나라당 반사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계산도 할 것이다.

▶ 5면으로 이어짐



서방은 이란·시리아 간섭 중단하라

>> 관련기사 6·9면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2년 (52개 호) 10만 원

• 신청 : 02-777-2792,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의 후원을 일절 받지 않고, 독자·지지자들의 후원으로 운영하는 신문들

후원해 주세요

후원회원 가입하기 문의 02-777-2792 / left21@left21.com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 결제, 핸드폰 결제, ARS결제도 할 수 있습니다.

후원 및 정기구독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누구의 말을 알까요?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참 어려웠다. 그것을 생각하며, 저 또한 잡 못 이루고 고민하는 날이 많았다.”
이명박, 눈물 난다

“경주 최씨는 흉년 기간에 어떤 경우에도 땅을 사지 말라는 가훈을 지켜 왔다.”

주택 대란 시기에 국고로 내국동에 집 산 이명박의 훈계

“이명박 대통령은 뺏속까지 서민이다. 밤 늦게 라면도 먹고 그른다.”

MB ‘아바타’ 이동관, 그 라면이 혹시 ‘가카새끼’?

“자원 개발은 99퍼센트가 가짜라고 보면 된다.”

기획재정부 고위층 인사의 말

“오염된 물에 … 싱싱한 물고기만 잡아넣는다고 되겠느냐. 얼마 안 가면 그 물에 그 고기”

이재오도 아는 한나라당 채신의 훈계

“이제 학생들[이] … 반미 · 증북 세력들과 스크럼을 짜고, 경찰차에 불 지르고, 청와대로 돌진할 수도 있다. … 크레인 위에 올라가 단식투쟁을 하는 초 · 중 · 고생이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조선일보〉의 학생인권조례 공포증

“학교에 등록금 보고 왔는가. 원효대사 이야기를 모르느냐, 일체 유심조라고 마음 먹기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고려대 학교 측 대표

“민주통합당이 집권하면 정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폐기할 수 있을까? 기업은 정리해고를 못 하게 되는 것일까? … 심하게 얘기하면 그건 사기다.”

〈한겨레〉성한웅 기자의 일갈

“여기서 만나니 이상한 것 같은데…”
한명숙, 통합진보당 당사에서 유시민을 보고

“어리석은 국민들이 선거를 잘못하여 종북분자들이 정권을 잡고 국군을 지휘하도록 만들면 내전적 구도가 이뤄진다. … 선거를 잘해야 피 흘림을 막는다.”

극우 조감제의 협박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격주 금요일 저녁 7~8시(다음호는 2월 17일)

강남역 11번 출구 글라스타워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종각역 4번 출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너편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사점(건국대앞), 물무집(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학로),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공장 앞)



〈레프트21〉 온라인

〈레프트21〉 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 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이주노조 전 위원장 미셸 카투이라 고별 인터뷰

“어디에 있든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2006년 1월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온 미셸 카투이라 동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차별에 맞서 싸움을 시작하면서 이주노조를 만났다. 2009년에는 이주노조 위원장이 돼 강제추방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투쟁해 결국 정부의 시도를 좌절시켰다. 미셸 동지는 트랜스젠더임을 당당히 밝히고 LGBT(성소수자) 운동에도 적극 동참했으며, 다른 투쟁에도 빠짐없이 참가했다. 사회 변혁에 대한 신념을 갖고 다함께 회원으로 가입하기도 했다. 미셸 동지는 아픈 할머니를 돌보려고 아쉽게도 한국을 떠나 필리핀으로 돌아간다. 다함께 활동가 이정원이 고별 인터뷰를 했다.

“다함께”가 나를 회원으로 환영해 주고 나와 이주노조에게 지속적인 연대를 해 준 것에 고마움을 전합니다.

내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보다는 지금 이주노동자 운동이 조금은 더 나은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주노동자, 이주민들이 겪는 차별이나 제도 등의 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주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직접 말하고 나서도록 고무하는 효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주노조에서 활동하면서 우리가 단지 다른 이주노동자들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작은 문제라도 스스로 부딪치며 깨달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이 스스로 변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저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나서도록 고무하고 임무를 부여하며 지원해 줄 때, 이주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인식하고 또 어떻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이 진정한 역량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주노조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계속 보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한국 운동, 그리고 다함께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또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의 이익을 빼앗아 가는지, 이 시스템을 바꾸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체제를 바꾸려면 우리 자신의 태도도 함께 바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원칙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단지 자신이 속한 한 부문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평등을 얻을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말고, 누구도 결핍이나 고통에 시달리지 않도록, 자신들의 이익 뒤에 고통 받는 사람들을 남겨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연대

나는 한국을 떠나도 그동안 해 온 연대와 투쟁을 유지해 나가고 싶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이주노조의 네팔 동지들이 했던 것처럼 필리핀에 돌아가면 이주노



김미리 기자

“체제를 바꾸려면 우리의 태도도 달라져야 한다. 원칙을 세우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한다.”

조 조합원이던 동지들을 모아 네트워크를 만들 계획입니다. 새롭게 이주노동을 준비하는 노동자들에게 이주노동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귀환한 이주노동자들 중 퇴직금이나 체불임금을 못 받았거나 여러 권리 침해를 겪은 사람들의 사건을 모아 해결 방법을 찾아보려고도 합니다.

이주노동자 운동뿐 아니라 한국 운동과 필리핀 운동의 연계를 위해서도 활동할 것입니다. 두 나라 사이의 LGBT 운동, 노동운동 등의 연대를 위한 활동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에 진출한 한진중

공업의 노동자들과 연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입니다.

나는 이주 문제를 통해 자본주의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왜 가족과 생계를 위해 이주노동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처지가 왜 나아지지 않는지, 빈곤은 왜 해결되지 않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져 주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이 문제들이 이 체제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나는 필리핀에서 이주노동자 운동에 계속 기여하면서 사람들의 의식을 더 넓고 근본적인 문제로 확장하기 위해 애쓰려고 합니다. 동지들! 함께 계속 투쟁합시다!

학생인권조례 훼방 놓는 우파들의 억지 주장

1월 26일, 드디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됐다.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던 학생들과 함께하는 현장 교사로서 매우 기뻐다.

그러나 ‘1퍼센트’의 대변자인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조례 무효확인소송을 냈고,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도 인권조례 공격에 나서고 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의 의의를 퇴색시키고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늦추려고 한다.

이들은 조례가 도입되면 교권이 무너지고 학생 지도가 어려워지고, 학생들이 ‘무분별하게’ 집회에 나서고, 임신·출산·동성애를 ‘조장’하게 된다고 주장한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을 더 추락시킬 것이라는 주장은 문제의 원인을 잘못된 곳에서 찾고 있는 것이며, 이는 교권에 대한 협소한 이해에서 비롯한다. 그들이 말하는 교권이란 ‘지배자들이 원하는 교육을 대리하는 교사가 그것을 학생들에게 자유롭게 강요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의 ‘교권’은 교사가 진정 원하는 교육을 할 권리, ‘지배자들이 강요하는 잘못된 교육을 거부하고, 학생과 선생님이 즐겨워할 수 있는 교육을 할



한민 기자

2008년 촛불시위 인권조례를 학교 현장에서 실제로 적용하려면 교사와 학생이 단결해 싸워야 한다.

권리’고, 이것을 빼앗긴 것이 문제의 원인이다. 이는 경쟁 교육을 강화하며 교사와 학생을 고통에 몰아 넣은 교과부와 이주호가 초래한 것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임신·출산·동성애를 용인하고 조장할 것이니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은 이들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것이다. 원치 않는 임신이나 출산을 하

게 된 학생들은 손가락질을 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라 보호 받아야 할 존재다. 동성애는 퍼져서는 안 되는 병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사랑의 한 형태일 뿐이다.

〈조선일보〉는 학생들이 2008년 촛불시위 패처럼 집회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걱정한다. 당시 많은 중고생들이 스스로 촛불을 들고 MB식 미친 교육에 반대했다. 그러나 잘못된 교육에 대한 학생들의 반발은 정당하며, 교육의 당사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다. 당시 학생들의 역동적 참여에 힘입어 미친 교육을 비롯한 MB의 정책들을 상당수 지연시킬 수 있었다.

트집 잡기

교과부는 절차도 문제 삼는다. 재의 요구 철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조례가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직무‘대행’이 재의 요구한 것을 교육감이 돌아와 철회한 것을 문제 삼는 것은 황당하다. 교과부와 이주호는 그들의 말대로 ‘법에도 없는’ 절차를 문제 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상위법과 배치된다는

주장도 근거 없다. 설사 학생인권조례를 제한하는 상위법(법률)이 있다면 해당 상위법 자체가 문제라고 봐야 한다. 인권은 최상위법인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이다.

인권조례는 독일 등 이른바 여러 ‘선진국’에서는 상식이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에서는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를 노고를 치하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국적 운운하면서 왜 학생인권 보장은 예외로 하는가.

우파들은 광노현 교육감의 선거 부정 혐의를 앞세워 인권조례의 정당성을 깎아내리려 한다. 하지만 온갖 비리와 부패로 얼룩진 자들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 무엇보다 광노현 교육감의 선거 부정 혐의와 학생인권조례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다.

학교 폭력을 비롯한 현 교육 문제의 책임은 경쟁 교육을 강화해 온 교과부와 이명박 정권에 있다. 그들은 그동안 책임을 회피해 오더니 이제는 아래로부터의 변화 물결에 두려움을 느끼고 억지 주장으로 이를 억누르려고 한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은 우파들의 군색한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학생인권조례를 끝까지 지켜야 한다.

조휘연 전교조 교사

박원순 서울시장은 교통 요금 인상 철회해야

박원순 서울시장은 근래 서울시가 무상으로 임대해 준 독재자 전두환의 경호동을 폐쇄할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용산 참사 3주기 기념 행사에 참석해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사과의 말을 전하며, 수감된 용산 철거민들의 석방을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행동은 그를 지지한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옳은 행동이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의 버

스·지하철 요금을 1백50원 인상하기로 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11월에 요구한 인상안을 받아들이던 이번 행동은 ‘임기 안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없다’고 한 약속을 어긴 것이다.

물론 물가 폭등을 부추겨 온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박 시장의 요금 인상 계획을 반대하는 척하는 것은 역겹다.

행정안전부는 국고 지원으로 공공 요금

을 억제할 생각은 않고, 요금 인상을 총선 이후로 미뤄 달라는 꼼수만 부리고 있다.

하지만 안 그래도 고물가로 교통비는 서민들은 박 시장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배신감을 느낄 것이다. 게다가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은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자극할 것이다.

서울시는 교통 부문 적자가 매년 7천8백억 원이 넘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러나 필수 공공서비스인 대중교통은 국고 지원을 받아야 마땅하다.

박원순 시장이 국비 지원율을 줄여 온 이명박 정부를 비판하며 버스·지하철의 적자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서민에게 적자 부담을 전가시킨 것은 참으로 실망스럽다.

박원순 시장은 당장 버스·지하철 요금 인상을 철회해야 한다.

김영익

역사의 재창조 — 2011년 혁명 물결의 이해

이집트 혁명 1주년을 맞아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혁명 물결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혁명이 더욱 심화할 가능성은 어떤지를 검토한다.

아랍 혁명은 놀라운 끈기를 보여 줬다. 아랍 혁명으로 일부 독재자들이 쫓겨났고 다른 독재자들은 흔들리고 있다. 아랍 혁명은 진행형이다.

이집트 사회를 민주화하려는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시리아 정권의 손에 5천명 이상이 죽었지만 시리아 혁명가들은 놀라운 용기와 투지를 보여 주고 있다.

그런데 이 혁명의 중요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역사적 비교를 해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이다.

아랍 혁명과 가장 자주 비교되는 것은 1848년 혁명이다. 1848년 혁명은 프랑스 왕정 타도로 시작됐고 유럽의 구체제를 뒤흔들었다.

이런 비교가 썩 내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1848년 혁명 때 구체제는 그럭저럭 버텼고 혁명을 진압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848년 독일 혁명의 극좌파 지도자 가운데 한 명이던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20년 후 망명지인 맨체스터에서 당시를 되돌아봤다.

엥겔스는 망명한 또 다른 혁명 지도자이자 자기 친구이자 동지인 칼 마르크스에게 이렇게 썼다. “혁명과 반혁명의 인과 관계가 철저히 망각되는 것이야말로 반동이 승리했을 때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것입니다. 독일의 젊은 세대는 1848년에 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들에게—편집자] 역사는 1847년에서 돌연 멈춥니다.”

엥겔스는 혁명과 반혁명의 역학에 관한 기억이 반동기에 어떻게 잊혀지는지 설명했다.

이전 혁명이 패배했을 때 나타나는 결과 가운데 하나는 혁명이 되돌아왔을 때 새로운 혁명을 반혁명이 승리한 시절에 만들어진 왜곡된 렌즈를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다.

세계적

오늘날이 바로 그렇다. 아랍 혁명은 — 그리고 세계경제 위기는 — 자본주의가 아무런 제약 없이 날뛰고 혁명이 구시대 유물로 취급되던 신자유주의 시대에 구멍을 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자유 시장의 반동 시대에 만들어진 신화들을 통해 아랍 혁명을 이해하려고 한다.

이러한 신화 가운데 하나는 비교적 깨끗하기 쉽다. 그것은 바로 튀니지의 벤 알리와 이집트의 호스니 무바라크의 전복이 전 세계에 서구식 자유 자본주의를 확산시킨 ‘색깔 혁명’의 최신판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명백히 잘못됐음은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으로 서방 제국주의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맺은 지배자들이 제거됐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다.

더욱이 세계은행은 그 정권들이 신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확고하고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찬양했다.

사실 반란을 추동했던 것은 바로 신자유주의의 결과였다. 신자유주의는 이집트와 튀니지 사회를 양극화하고 빈곤하게 만들었고 정권과 밀접히 관련된 소수 엘리트를 살찌웠다.

시리아에서도 이것과 똑같은 동역학이 작용했다. 바샤르 알아사드는 이스라엘·서방과 반목하지만, 그의 경제 ‘개혁’은 한 줌의 사업가 패거리들한테만 이득이 됐다.

그러나 신자유주의가 횡행하던 시절 신자유주의를 비판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도 신화를 만들어 냈다. 가장 영향력있는 것 가운데 하나는 마이클 하트와 안토니오 네그리가 《제국》에서 발전시킨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 무정부의 ‘다중’이 반자본



이집트 혁명 1주년을 맞아 타흐리르 광장에 혁명 열사의 이름을 새긴 탑을 세우고 있는 이집트 민중 이집트 노동자 운동이 군부와 사정들에 맞선 투쟁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지에 따라 혁명의 결과는 달라질 것이다.

주의를 주도한다고 주장했다. 다중은 경제·정치적 권력의 성체를 정면이 아니라 측면에서 공격한다는 것이다.

최근 폴 메이슨은 신간 《사방에서 난리가 나는 이유》를 통해 비슷한 생각을 퍼뜨리려 한다. 물론, 메이슨은 이 책에서 옳은 지적도 많이 한다. 예컨대, 메이슨은 경제 위기로 미래를 빼앗긴 대졸 실업자들이 아랍 혁명뿐 아니라 긴축에 반대하는 남유럽의 운동, ‘점거하라’ 운동에서 중요한 구실을 했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런 그럴듯한 분석도 통신 기술과 소셜 미디어에 대한 다소 순진한 열광 탓에 손상된다.

그는 이렇게 썼다. “정보 네트워크가 사회화되기 시작하면 그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진실이 이제는 거짓보다 빨리 퍼질 수 있고, 모든 선전이 즉각 불꽃을 일으킬 것이다.”

소셜 미디어

메이슨은 대서양 건너편[미국]에서 소셜 미디어가 자유 시장과 주권(州權) 옹호를 부르짖는 괴짜 공화당 예비 대선 후보 론 폴의 선거 운동에 어떻게 쓰였는지 봐야 한다. 더 나아가 공화당 우파는 정보 기술을 능수능란하게 이용하며 버락 오바마 정부를 약화시켰고 이제는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서로 혈투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것들은 활동가들이 의사소통하고 조직하는 데 확실히 중요한 구실을 했다. 그러나 인터넷과 휴대전화 통신이 끊긴 뒤 벌어진, 무바라크를 끝장낸 결정적 싸움이 벌어지는 동안에는 훨씬 구닥다리 기술 — 일반 전화와 TV(특히 알 자지라) — 이 사용됐다.

현재 이집트 혁명은 무바라크의 몰락

이후에도 최고군사위원회 형태로 살아남은 옛 정권에 맞선 싸움으로 발전했다.

이 투쟁을 전진시키는 것은 젊은 노동계급 혁명가들과 국가의 무력 — 군대와 소요 진압 경찰들 — 사이의 충돌이다.

혁명적인 사법(청년)들이 트위터로 의사소통할 수도 있다. 그러나 메이슨이나 네그리와 달리 그들은 국가 권력을 회피할 것이 아니라 타도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안다.

그러나 아랍 혁명의 미래 궤적을 그릴 때 우리가 맞서야 할 아주 강력하고 견고한 신화가 또 하나 있다. 그것도 역시 신자유주의 시대에 생겼다. 바로 이슬람 혐오다.

많은 사람, 심지어 급진적이고 혁명적인 좌파조차도 벤 알리와 무바라크의 타도로 주된 수혜를 입은 것은 이슬람주의자라고 생각한다.

이슬람주의자들 — 튀니지의 알나흐다(부흥)당, 이집트의 무슬림형제단과 자유정의당 — 이 최근의 총선에서 승리를 거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비판적인 평가 뒤에는 두 가지 오류가 깔려 있다. 첫째는 이슬람주의를 하나로 통일된 반동 세력으로 다루는 것이다. 사실, 무슬림형제단은 대단히 복잡한 역사를 통해 형성된 복합적 정치 구성물이다. 무슬림형제단은 수십 년 동안 무바라크에게 가장 일관되게 맞선 야당이었기에 이득을 봤다. 반면에 세속 세력 —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 — 은 같은 기간 동안 영향력과 신뢰를 모두 잃었다.

정치적으로 성공을 거두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지 제도를 제공하려고 노력한 덕분에 무슬림형제단은 매우 다양하고 모순적인 세력들을 지지층으로 확보했다. 명망있고 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사업가들부터 거리 투쟁을 지지하는 청년

활동가까지 모두 무슬림형제단의 이름으로 활동한다.

이것은 [무슬림형제단이 만든] 자유정의당이 최고군사위원회와 공식적인 협력관계를 맺으면서 무슬림형제단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대한 압력 아래 놓이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가장 중요한 압력 중 하나는 경제 위기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

이집트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최

근 성명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줄고 있다(혁명 후 1년 새에 3백60억 달러에서 1백50억 달러로 하락). 어떠한 가격 통제 장치도 없는 탓에 물가가 오르고 있다. 실업도 계속 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세계 자본주의의 심각한 위기라는 배경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 세계경제의 위기로 이집트 자본주의가 관광, 수에즈 운하, 해외 투자에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감소하고 있다.”

둘째 오류는 혁명 과정의 일시적 국면을 혁명의 종착점인 양 제시하는 것이다. 이전의 혁명들과 마찬가지로 이집트 혁명에서도 의식들이 변하는 속도는 다양하다.

적

소수의 혁명적 청년들은 대부분 최고 군사위원회를 박살내야 할 주된 적으로 본다. 그러나 노동자, 농민, 도시 빈민 가운데 더 넓은 층은 군부와 무슬림형제단한테 이집트 사회를 개혁할 기회를 기꺼이 주려 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혁명가들한테도 호의적이다.

이러한 사람들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지가 이집트 혁명의 결과를 결정할 것이다. 그들이 최고군사위원회에 반대해 싸우는 혁명적 소수에 가담할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으로 — 어쩌면 총선에서 성공한 살라피주의적인 극단적 이슬람주의 신봉자들 쪽으로 — 이동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은 무엇보다도 이집트 노동자 운동이 장군들과 사정들한테 모두 맞서 집단적 투쟁을 벌이는 진로를 제시할 수 있을지 없을지에 달려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집트에서는 새로운 노동조합이 탄생하고 매우 전투적인 파업이 계속 벌어졌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자기 자신의 조직된 정치적 목소리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랍 혁명의 의미를 왜곡하는 온갖 신화들이 있지만, 이 혁명의 미래는 열려 있다. 이러한 투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역사는 재창조될 수 있다.

출처 영국군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287호

번역 정중수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유럽학 교수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장이다.

폴라주 ⑥7

폴라주 : 다양한 재료로 그리는 그림. 세상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다는 의미

DIA or DIE

자본을 위해 없어도 있다고 하는 다이아
자본을 위해 있어도 없다고 하는 20명의 죽음



일루전

통합진보당은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이 계속 정체하는 상황에서 총선 후보 선출을 둘러싼 각 세력들의 감등까지 커지면서 위기감이 나타나고 있다. 노회찬 대변인은 통합진보당이 현재 “심각한 위기”라고 걱정했다.

물론 통합진보당의 지지율 하락과 정체는 양대 자본가 정당에 우호적인 기성 언론의 의도적 외면 속에 대중의 시야에서 진보정당이 사라진 것이 핵심 이유일 것이다. 대중 투쟁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선거에서 뭘 곳을 밀어주자’는 정서가 큰 것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진보의 존재감을 스스로 갉아먹은 측면도 있다. 통합 과정에서 강령을 후퇴시키는 등 진보적 정체성을 훼손해 온 것이다.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민주통합당과의 선거연합을 전술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로 삼으면서 자본가 정당과 진보정당 간의 차별성을 흐리는 것도 문제다.

상당수 사람들이 친노 세력이 부상한 민주통합당과 ‘노무현(과 전태일) 정신을 계승한다’는 통합진보당이 무엇이 다른지 헛갈려 하는 판에, 그것을 더 증폭시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민주통합당이 ‘좌클릭’했고, 정책 공조를 전제로 할 것이라며 선거연합을 정당화한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이 믿을 수 없는 세력이라는 것은 몇 차례나 드러났다. 그래서 이정희 공동대표도 “[민주당이] 함께 하자고 약속한 사안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느냐는 점에서 상당히 불안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최근 지지율이 상승한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과 석패율제 등에 합의하며 진보정당의 뒀을 축소하려는 시도까지 하고 있다.

따라서 **통합진보당 지도부가 민주통합당과 연대를 최우선시하며 진보의 차별성을 훼손하면 지지자들의 투지와 열정이 약해질 수 있다.**

진보의 차별성 훼손은 통합진보당이 내건 총선 5대 비전에 ‘노동’ 의제가 빠진 것에서도 드러났다.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강령에서 ‘노동’ 의제를 후순위로 돌리더니, 그마저도 민주통합당과의 선거연합을 고려해 더 약화시킨 것이다.

그래서 통합진보당 권영길 의원은 “현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민주통합당과 연대를 최우선시하며 진보의 차별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재의 통합진보당에 민주노총과 노동자가 설 자리가 없으며 [통합진보당의 노동 정책이] 민주통합당 노동 정책과 차별성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통합진보당은 “진보가 불안정하고 급진적이라는 명에”(심상정 공동대표)를 벗어던지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통합당과 구분되는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며 아래로부터 투쟁을 확대해 힘을 키워야 한다.

전투

2004년에 진보정당 국회의원 10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우파의 반동에 맞서 대규모로 벌어진 ‘탄핵 반대 운동’이 그 배경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선거나 투쟁에서 불가피한 특정 상황에서 민주통합당과 연대하거나 민주통합당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말이다.

이 점에서 최근 통합진보당의 일부 당원들이 당의 정체성과 지향을 분명히 드러내고자 당명에 ‘노동’을 다시 포함하자는 의견을 제기한 것은 전적으로 옳다.

권영길 의원도 [매일노동뉴스] 인터뷰에서 통합진보당의 지향이 좀더 좌파적이고 급진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가들조차] 다보스 포럼에서 자본주의가 위기이고 철 지났기에 이제 새로운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 많은 이들이 자본주의 시스템은 끝났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지에 대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이 총선 때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출마하고 독자 완주해서 진보의 가치를 선전·선동하고 정당득표율을 올리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도 반갑다. 실제 진보진영 후보가 대거 출마해 의미 있는 득표를 한다면, 정치판에 진정한 압력을 형성할 수 있고 많은 노동자들에게 자

신감을 줄 수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 일부 당원들이 ‘진보의 정체성과 노동 중심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약칭 진노사)’을 결성해 “당 지도부의 우경화 시도에 반대해 진보의 정체성과 정통성을 계승”하려는 것도 주목된다. ‘진노사’는 “통합진보당에서 노동자 중심성이 약화되는 것에 반대”하고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상당한 계급에 기반한 세력들 간의 통합이 또 다른 분란과 분열을 잉태할 것”이라는 예측이 점차 입증되는 상황에서 좌파 활동가들의 구실이 더 중요하다.

그동안 민주적 토론과 당내 민주주의도 무시한 채 합심해서 패권적으로 우경화를 추진하던 세력들 사이에서 불협화음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패권주의 비판’ 등을 내세우지만 각 세력이 서로 자기 지분·자리만 늘리려고

하는 듯하다.

“당심과 민심의 괴리”를 지적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자’는 심상정 공동대표의 주장도 우려스럽다. 심 대표가 바로 이런 논리로 2008년 분당 때 우경화를 추진했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서로 갈등하는 세력 중 어느 쪽도 더 급진적이고 투쟁적인 방향의 대안을 제시하며 그에 적합한 좌파 후보를 내세우려고 고민하지 않는 것이 문제다.

좌파 활동가들은 통합진보당에 비판적 지지의 관점으로 개입하면서 통합진보당 지도부의 우경화 시도에 반대하고 기성 정당과는 다른 진보의 독자적 가치와 급진성을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더불어 ‘불안정한 3자 동거 체제’가 낳는 갈등에 대처하며 미래에 일어날 더 중요한 전투를 준비해야 한다.

박성환

통합진보당에 대한 사회주의자들의 올바른 태도는 무엇인가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과 통합한 것은 명백히 진보의 원칙과 단결을 훼손하는 일이었다. 그래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 통합을 반대했던 다함께의 호소에 많은 투사들과 좌파 활동가들이 호응했던 것이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역부족으로 통합을 막지 못했다. 결국 통합진보당이 등장했고, 복수의 진보정당 구도는 고스란히 남았다.

따라서 통합진보당 외에도 노동조합 속에 기반이 있는 다른 정치 조직들이 활동하는 한은 ‘민주노동당만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민주노총 정치 방침은 유효하지 않고 철회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다함께는 복수의 진보정당과 좌파 정치세력들로 지지를 넓히는 진보 다원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좌파 노조 지도자와 활동가들이 결집한 ‘3자통합

당 배타적 지지 반대와 올바른 노동자계급정치 실현을 위한 민주노총 조합원 선언운동본부’(이하 선언운동본부)는 아예 ‘통합진보당은 진보정당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

물론 좌파라면 신자유주의 정책과 노동운동 탄압을 자행한 전력이 있는 참여당에 대한 이 동지들의 반감에 심분 공감해야 한다.

그러나 참여당과 통합진보당을 동일시해, 통합진보당까지 진보진영에 속하지 않는다면 배척하는 태도는 옳지 않다. 그것은 민주노동당 출신 당원들이나 새로 통합진보당에 가입하는 많은 노동자들을 같은 편이 아니라고 내치는 것이다. 그들과 연대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노동자들에게 통합진보당에 투표도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조합원인 통합진보당 당원이 3만여 명이 넘고, 근래에만 4천여 명의 노동자가 통합진보당에 집단 입당한

상황에서 이런 입장은 어불성설이다. 그래서 선언운동본부 내에서조차 ‘통합진보당을 절대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은 합의되지 않았다.

실제로 선언운동본부 내의 많은 진지한 활동가들은 통합진보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들과도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선언운동본부에 동참하고 있는 활동가들 중 일부도 통합진보당 당원인 실정이다.

균열

사실, 통합진보당을 반대하는 좌파들이 지향하는 바는 단일하지 않다. 그 속에는 진보신당과 사회당의 통합을 추구하는 쪽도 있고, 진보신당 등도 개혁주의이기 때문에 대안이 아니라고 보는 쪽도 있고, 강령 통일을 통한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함께 추진하다가 갈라져서, 서로 날카롭게 각을 세우고 있는 단체들도 있다. 그래서 이미 그들 내부에서도 서로에

대한 비판과 균열이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선언운동본부 소속 단체들은 대체로 ‘통합진보당은 진보가 아니며 그래서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특히, 이 동지들 중 일부는 통합진보당 뿐 아니라 오래 전부터 민주노동당과 심지어 진보신당도 지지하지 않았다. 참여당과의 통합뿐 아니라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도 지지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개혁주의 정당의 지지자들과 함께 활동할 기회를 놓쳐 왔다.

그러면서 2008년 민주노동당 분당 때나 최근처럼, 개혁주의 정당이 분열하거나 위기에 빠지면 자신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고 착각했다. 그러나 함께 운동을 건설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비판만 해서는 기회를 얻기 힘들다.

사실, 서로 정치가 다른 좌파들이 모여 토론을 통해 강령을 통일하고 사회주의 정당 건설을 한다는 이들의 구상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이들이 추진한 당 건설은 거듭된 총돌과 분열만 낳으며 실패했다. 따라서 현재 이 동지들은 ‘대안 없는 반대’,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신랄한 지적을 받고 있다.

물론 ‘개혁주의 정당과는 구분되는 혁명 조직이 필요하다’는 이 동지들의 취지는 옳다. 트로츠키도 독립적인 혁명 조직을 건설하는 것은 “공산주의의 기초”라고 했다. 다함께가 통합진보당에 개입하면서도 정치적·조직적 독립을 유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혁명정당 건설은 스스로 선포한다고 되지 않는다. 개혁주의 대중 속에서 좌충우돌하며 계급에 뿌리내리는 오래 걸리고 힘든 과정이 필요하다. 안토니오 그람시도 “계급을 지도하는 능력은 당이 그 자신을 혁명적 기관이라고 선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당은 대중 속에

» 5면으로 이어짐

돌아온 친노, 어떻게 볼 것인가

1월 중순 민주통합당 지도부 경선에서 한명숙과 문성근이 각각 1, 2위를 한 것을 계기로 친노는 명실공히 기성 정치의 중심부로 재입성했다. 최근 한 여론조사(리서치뷰)에서 문재인은 안철수를 제쳤다.

이명박 당선에 대한 열패감으로 안희정이 자신을 포함한 친노 세력을 폐족(廢族.조상이 큰 죄를 지어 벼슬을 할 수 없게 된 자손)으로 묘사한 지 5년 만이다.

친노 부활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가장 기저에 있는 요소는 현 정부에 대한 대중들의 사무치는 분노다. 현재 민주통합당이 반사이익의 수혜자가 됐고, 주된 혜택을 친노가 누리고 있다.

사실 민주당 집권기의 환멸감이 뿌리 깊어서 민주당의 반사이익 누리기는 그동안 충분치 못했다.

이 때문에 지난해 말 민주당은 옷을 갈아입고 당명을 민주통합당으로 바꿨다.

특히 박원순의 서울시장 당선 이후 NGO 지도자들이 민주당으로 들어가면서 진보적 대중 사이에서 민주당을 고쳐 쓸 수 있겠다는 기대가 커졌다.

민주당 바깥에서 세를 확장할 수 있었던 문재인, 문성근 등 친노 세력들은 구태의연한 기존 민주당 지도부를 불신하는 대중들의 불만을 흡수하며 민주당의 새 옷이 되기를 자처했다.

노무현의 후계자들은 지난 몇 년 동안 정치적 부활을 준비했다. 그 계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고통 받은 대중들은 마치 '순교자'처럼 된 노무현에 동질감을 느끼며 감정이입을 했다.

이후 노풍이 불었고, 노무현의 왼팔과 오른팔로 불린 안희정과 이광재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각각 충남과 강원에서 도지사로 당선됐다.

‘순교자’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통합이 결렬되면서 민주당 왼쪽에서 대안이 마련되지 못한 것도 친노에게 유리한 조건을 조성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참여당을 '진보'로 포장해 주며 통합을 추진한 것도 친노의 몸값을 높여 줬다.

그러나 부활한 친노의 앞길이 계속 탄탄할지는 속단할 수 없다.



2006년 경기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를 만들려고 군대를 투입해 민간인을 진압하도록 지시한 한명숙은 반성도 사과도 없다.

친노 세력이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와 그들의 주장을 검토하면, 여전히 그들이 노무현 정부 때의 실패를 되풀이할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자신이 정무수석일 때 노동자 파업에 경찰력을 투입해서 강제 해산 시킨 일을 정당화하며 노동계의 '과욕'을 탓한다. 또 '전교조 때문에 교육 개혁을 못했다'는 식으로 말한다. 박연차 게이트, 노건평 스캔들 같은 비리 혐의 사건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한다.

또, 신자유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다. 문재인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된 한미FTA에 “근본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반대 논리가 과장돼 있다”며 한미FTA 반대 운동을 평가절하 하기도 했다.

한명숙은 참여정부 총리 시절 평택 미군기지 확장 이전 반대 운동에 군부대를 투입해 강제 진압한 사실을 사과한 적이 없다.

투자자국가소송제(ISD)를 포함해 한미FTA를 지지한 충남도지사 안희정은 4대강 사업을 두고도 “보 설치와 대규모 준설을 빼면 수용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유성기업 투쟁 때도 “파업도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직장폐쇄도 사업주의 권리”라며 사측의 노조 탄압을 방관했다.

한때 노무현의 '경제 가정교사'로 불렸던 유종일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는 이런 참여정부 인사들에게 느낀 염증을 토로했다. “5·31 지방선거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처음 나온 얘기라는 게 '부동산세' 완화였다. ... [그들은] '상류사회'에서 놀고 거기서 듣는 얘기로 판단한다.”

친노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 — 기업, 보수 정당, 국가 관료 — 가 이들의 정치와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상류사회

라미드 그룹(옛 썬앤문 그룹) 회장 문병욱에서 이 관계를 엿볼 수 있다. 노무현의 '후원자'로 불린 문병욱이 최근 한나라당 박희태 캠프에 돈 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수사 받는 걸 보면 이 삼자가 대변하는 사회 세력의 끈끈한 연결망을 알 수 있다.

2005년 노무현이 한나라당에 대연정을 제안하면서 “두 당이 실제로는 정책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고 한 배경에는 이런 물질적 기초가 있다.

친노가 삼성과 맺은 끈은 더 단단하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국정과제와 국가 운영에 관한 어젠다》는 노무현 정부 출범 직전에 제출되어 참여정부 정책의 핵심 과제 형성에 기여했다. 참여정부 시절 “삼성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국정이 굴러간다”는 얘기가 나왔을

정도다.

이처럼 친노가 주도하는 민주통합당도 한나라당과 마찬가지로 기업의 탄탄한 후원에 의존해 운영되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그 핵심 기반은 같다.

그래서 친노 주도의 민주통합당도 입으로는 진보 개혁의 제스처를 취하지만 행동에서는 돈 봉투 전달대회 합법화, 석파울제 도입 등에서 한나라당과 야합하는 것이다. 문재인과 문성근도 석파울제에 반대하는 척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과거 민주당도 이런 식으로 당선 전에는 대중의 기대를 먹고 살다가 당선 후에는 대중의 체념을 먹고 사는 일을 반복했다.

1월 29일 민주통합당이 총선을 겨냥해 발표한 재벌세 신설도 마찬가지다. 민주통합당의 재벌세는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의 비판처럼 4대 핵심 재벌에게는 전혀 부담되지 않는 수준이다.

그마저 재계와 기획재정부가 반대하고 나서자 이를 만에 재벌세 용어를 폐기하겠다고 물러섰다.

국가 관료들과 기업들의 압력이 다소 약한 야당일 때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을 보면 그들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거나 집권할 때 더 분명히 한계를 드러내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동엽

》1면에서 이어짐

결국 이명박과 박근혜는 엄청난 정치 위기를 그럭저럭 버텨 가면서 생명을 연장하는 상태다. 게다가 이명박은 “남은 임기 동안 하루도 소홀히 않고 열심히 하겠다”며 KTX 민영화, 한중 FTA 등도 추진하려 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을 공격하려는 불씨도 지피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명박 정권은 어차피 끝났고 선거에서 민주당 등을 통해 심판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상황의 모순과 진정한 과제를 못보게 할 수 있다. 그 사이에 이명박은 희망버스 계획을 뒤지고 참가자들을 소환하는 등 발톱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위기는 해결되지 않았다. 이명박의 부패 추문과 집권당의 내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의 말잔치뿐인 정당·정책 ‘쇄신’에 기대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의 두 마리 토끼 잡기도 여전히 모순 속에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총선 준비와 민주당과 야권연대 추진에만 매달려서는 안된다. 일찌감치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주류 자본가 정당에게만 유리한 구도가 형성되기 마련이다.

이명박 정부의 반동적 정책과 온갖 부패 추문들에 맞선 대중적 행동 건설에 주력하며 그 속에서 진보의 차별성 있고 급진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민중의 힘’ 같은 공동 투쟁을 위한 상설연대체가 이럴 때 별다른 구실도 못하고 있는 상황은 실망스럽다.

지난 연말 한미FTA 저지 투쟁이 남긴 여진 속에 최근 현대차 노동자들이 3년만에 파업에 나서 하루만에 승리하고, MBC노조도 2년 만에 사장 퇴진 파업에 나선 상황은 저항의 가능성을 보여 준다.

현 집권당이 직면한 위기의 깊이를 볼 때, 진보진영이 단결해서 이런 투쟁들을 건설하면 이명박과 박근혜의 위기 탈출을 막고 진보 대안을 건설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

김문성·전지윤

》4면에서 이어짐

서 자신의 활동의 결과로서만 대중으로 하여금 자신을 ‘그들의’ 당으로 승인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대중의 밖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추상적 선전만 할 것이 아니라, 대중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레닌은 심지어 《좌파 공산주의 — 유치증》이라는 저작에서 “반동적”인 곳이라도 “반드시 대중이 있는 곳에서 작업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혁명가들은 개혁주의 조직에 용해되지 말아야 하고 개혁주의 지도자들에 대한 비판도 삼가지 말아야 한다. 다함께는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 점에 언제나 유의해 왔다.

이런 개입은 통합진보당 지지 노동자들을 유시민 등에게 내맡기지 않기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다. 혁명가들이 통합진

보당에 대한 관여와 개입을 중단하면 누구보다 홀가분해 할 것은 바로 유시민 등일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개혁주의 대중 속에 개입하며 혁명적 당을 건설하려는 다함께에게 ‘왜 당 건설을 안 하고 개혁주의 조직 속에 있냐고 비판하는 것은 마치 물속에서 수영하고 있는 사람에게 ‘왜 수영법을 익히지 않고 물에 들어가 있냐고 말하는 것과 같다.

비판적 지지

이런 관점으로는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프루동주의자, 라살레주의자, 바쿠닌주의자, 영국 노동조합주의자 등과 함께 제1인터내셔널을 결성했던 것을 이해할 수 없다. 또, 레닌이 1920년 영국 공산당원들에게 (가맹 형식으로) 영국 노동당에 입당하라고 강력히 충고한 것도 이해할 수 없다.

물론 개혁주의 정당에 개입하기 위해서 꼭 가입하거나 가맹할 필요는 없다. 가입·가맹하지 않고도 비판적 지지의 관점으로 개입하며

얼마든지 영향력을 늘릴 수 있다. 그러나 비판의 자유를 포함한 정치적·조직적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입이나 가맹을 통한 개입이 좀더 효과적인 전술일 수 있다. 이를 통해 혁명가들은 개혁주의 대중과 긴밀히 소통하며 대중 투쟁 건설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일부 급진좌파들은 통합진보당 가맹이나 가입은 고사하고 심지어 아예 어떠한 지지·개입·연대도 거부하고 있다. 이처럼 오로지 개혁주의 조직을 적대하고 폭로하겠다는 태도는 좌파가 개혁주의자들과 협력해 공동의 대중 투쟁을 건설하며 영향력을 넓히는 데 큰 장애가 된다.

그런 투쟁 건설에 헌신하고 투쟁 속에서 개혁주의보다 효과적인 대안과 방향성을 제시할 때 비로소 좌파가 개혁주의의 기반을 자신의 것으로 가져오며 사회주의적 대중 정당을 건설할 수 있을 텐데 말이다.

전지윤

계간

이론과 실천의 통일

마르크스21

12호 2011년 겨울

가격: 16,000원

www.marx21.or.kr

12호 2011년 겨울

마르크스21

12호 2011년 겨울

마르크스21

정점

오늘의 위기와 저항

우리 시대의 경제 위기

미국 '잡거하라' 운동의 의의

오늘날 중국의 저항 운동

계속되는 이집트 혁명

카다피 몰락과 리비아의 앞날

특집

알렉스 캘리니코스 2011년 방한 강연 (2)

금융화와 오늘의 세계경제

사회민주주의 — 제대로 이해하고 대처하기

인민전선이 진보운동의 패배를 부르는 이유

대담: 오늘의 세계와 혁명적 좌파

기획 연재

왜 자본주의는 경제 위기에 빠지는가

1. 마르크스의 경제위기론과 그에 대한 비판

서평

《노동계급 형성과 민주노조운동의 사회학》

한국 노동계급은 쇠퇴했는가?

구독 문의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교보문고, 영풍문고, 반디앤루니스 등에서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정가구독료

1년 64,000원 | 2년 120,000원 | 3년 180,000원 | 5년 300,000원 | 7년 420,000원 | 10년 600,000원

(마르크스21)의 지속적 발간을 위해 여러분의 후원이 필요합니다. 따뜻한 지지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웹사이트(www.marx21.or.kr)에서 휴대문 결제, 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를 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은 왜 이란을 압박하는가

차승일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직접적 이유는 이란의 핵무기 개발 시도다.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는 미국이 대이란 압박을 강화할 좋은 구실이 됐다. IAEA는 기존 입장과 달리 이란이 핵무기를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미국이 이란을 압박하는 배경에는 이란의 중동 지역 내 영향력 강화가 있다.

미국은 중동 지역 지배를 공고히 해서 세계적 패권을 유지하려 한다. 바로 이 이유에서 미국은 2000년대 초반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략했다.

그런데 의도와 달리 미국은 창피를 당하며 이라크에서 쫓겨났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역사적으로 이란의 영향력은 더 커졌다.

그래서 미국은 2006년에 이란을 공격하기 위한 전초전으로 이스라엘과 공조해 레바논을 공격했지만 패배하고 말았다.

그 이후에도 미국은 거듭 이란을 압박해 왔다.

그런데 미국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중동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도 제기하지 않는다. 되레 미국이 막대한 원조로 이스라엘의 핵무장을 도왔다고 볼 수 있다.

이란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스라엘과 달리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바로 이 점이 갖은 핑계를 들어 이란을 괴롭히는 근원적 요인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이란이 굴복하기 전에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테고, 군사적 공격 기회도 호시탐탐 노릴 것이다.

물론 이란은 이라크보다 훨씬 발전한 나라이므로 미국이 당장에 군사적 공격을 감행하지는 못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이라크 전쟁에서 당한 골목 때문에 주저할 수 있다. 게다가 심각한 경제 위기도 새로운 전쟁물이에 제동을 거는 한 요인일 것이다.



사진 출처: AP/게티

미국의 경제 제재로 고통 받은 이라크 어린이 이란에서 이런 비극이 반복대선 안 된다.

이런 점 때문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불협화음”을 내는 듯 보일 수 있다. 즉, 이스라엘은 당장 침공하려고 안달이 났는데 미국은 미적지근하다고 말이다.

그러나 그 차이를 너무 크게 봐서는 안 된다. 단적으로 미국 대통령 오바마는 신년 국정 연설에서 이란에 대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게다가 미국 지배자들은 미국의 경제

적 영향력 실추를 압도적 군사력으로 벌충하는 전략에는 모두 동의한다. 예컨대 오바마는 이라크 전쟁은 비판했지만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파키스탄으로 확장했다.

미국은 적절한 계기가 생기고 자신감을 회복한다면 능히 전쟁을 벌일 것이다.

이미 유엔 제재로 타격을 입고 있는 이란을 상대로 경제적 압박을 한층 강화하

지금의 위기가 전쟁으로까지 치달을지는 불확실하지만

미국의 이란 압박으로

세계가 한층 불안정해지고

이란과 전 세계 민중이 겪을

고통이 더 커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는 것은 이란을 2003년의 이라크처럼 약화시킬 목적일 수 있다.

또한 이란 압박 강화는 아랍 혁명에 대한 대응이기도 하다.

아랍 혁명으로 미국 대중동 전략의 한 축인 이집트가 크게 흔들렸다. 이로 말미암아 또 다른 축인 이스라엘의 처지도 위태로워졌다.

미국은 리비아 혁명에 개입하면서 아랍 혁명 전체에 개입할 발판을 마련했지만 아직까지 아랍 민중을 통제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통제권

미국이 아랍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되찾으려면 중동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에 걸림돌 구실을 하는 이란을 길들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지배자들이 ‘잠재적 경쟁자’로 여기는 중국을 견제하려 해도 중동 석유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한편, EU는 미국의 이란 제재에 동참하면서 식량 수출을 금지하는 독자 제재까지 추진하고 있다. 유럽 지배자들에게는 단순히 미국을 돕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중동 지역에서 독자적 이해관계를 구축해 보려는 계산이 있는 듯하다. 미국 패권의 약화 속에

서 제국주의 간 주도권 다툼이 불안정을 더 부추기는 것이다.

지금의 험악한 분위기는 IAEA 사찰단의 이란 방문(1월 30일~2월 2일) 후에도 한동안 지속될 듯하다.

우선 IAEA 사찰단이 11월 보고서의 내용을 근본에서 뒤집는 입장을 내기는 힘들 것이다. 아마도 이란의 우라늄 농축 기술 수준이 당장 핵무기를 만들 만큼은 아니지만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에 곧 도달할 수 있다는 식의 입장이 될 듯하다.

그러나 설사 이란의 핵무기 개발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미국의 이란 압박이 정당성을 얻는 것은 아니다.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그것은 미국과 서방 열강들이 수십 년간 이란을 압박한 결과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미국과 서방의 이란 압박을 먼저 반대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도 반대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한국의 일부 NGO의 주장에는 약점이 있다. 일부 NGO는 미국의 이중 잣대를 옳게 비판하고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도 분명히 반대하면서도 ‘이란에 대한 대응은 IAEA 사찰 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사실로 밝혀졌을 때 자승자박의 논리가 될 수 있다.

미국의 이란 압박으로 말미암은 피해는 아무 잘못 없는 이란 민중과 전 세계의 민중이 지고 있다.

최근 이란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면서 이란 리알화 가치가 폭락했고 물가가 천정부지로 뛰었다. 이란의 체감 물가가 거의 40퍼센트 상승했다는 보고도 있다.

또한 석유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전 세계의 노동계급과 민중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지금의 위기가 전쟁으로까지 치달을지는 불확실하지만 미국의 이란 압박으로 세계가 한층 불안정해지고 이란과 전 세계 민중이 겪을 고통이 더 커졌다는 점은 분명하다.

또한 미국과 서방의 제국주의적 야욕이 멈추기 전에는 이 쟁점이 거듭거듭 불거지리라는 점도 분명하다.

한국 정부는 이란 제재 동참 말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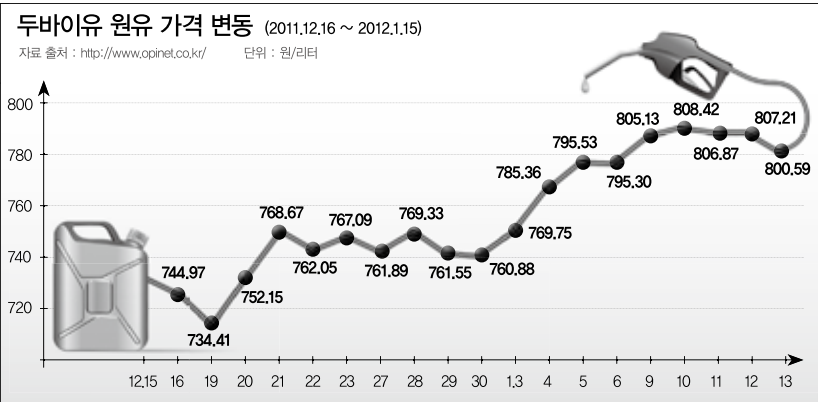
1월 16일 미국 국무부 대북·대이란 제재 조정관 로버트 아인혼은 한국을 방문해 “이란과 북한의 상황은 연결된 문제”라며 이란 제재에 동참하라고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은 모두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의 압박 때문에 생긴 결과라는 점에서 보면 아인혼의 말이 영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북핵을 해결하기 위해 이란 제재에 동참하라는 말은 어불성설이다. 여태껏 이란과 북한에 대한 제국주의적 압박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키워왔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간의 북미관계를 봐도 알 수 있다. 미국은 핵확산금지조약(NPT)에도 가입해 있던 북한을 계속 압박하고, 북한에 경수로를 지어 주겠다는 약속도 어기고, 2000년에는 북한을 “깡패국가”라고 몰아세웠다. 그러는 동안 북한은 2003년에 NPT를 최종 탈퇴했고 2005년에는 핵무기 보유를 선언했다.

따라서 북핵 문제를 풀려면 아인혼의 말과는 정반대로, 미국의 제국주의적 행보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석유 가격 상승으로 이란과 한국 민중의 부담만 배가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란산 석유 수입을 일부 감축하면서 국방수권법의 예외 조항을 적용 받는 식으로 이란 제재에 동참할 듯하다.

아랍에미리트로부터 석유 우선 공급 약속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값싼 이란산 석유 수입을 줄이는 데서 오는 피해를 완전히 막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이란은 한국의 중동 교역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아무리 국방수권법의 예외 조항을 적용 받는다고 해도 대이란 무역에 어느 정도 차질이 생기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주로 이런 ‘경제적’ 이유를 들어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을 반대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허점이 있다. ‘경제적’으로만 판단하더라도 한국 경제에는 대이란 무역보다 대미 무역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란 제재에 동참하지 않아 미국으로부터 보복을 당하면 경제적으로 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맞서기 힘들다.

한국 지배계급은 최강대국 미국의 하위 파트너로서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높

이는 호가호위(狐假虎威) 전략을 취해왔다. 그래서 한국 지배계급은 경제적으로 약간 손실을 입더라도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이런 한미동맹 강화로 한국의 노동계급과 민중에게는 득이 될 것이 없고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다.

2000년대부터 미국이 벌인 전쟁물이에 한국이 적극 동참하며 한국의 국제적 위신이 상승하고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졌을지는 몰라도, 한국 민중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지난 10여 년 동안 노동소득분배율이 하락하는 등 한국 민중의 생활조건은 나빠졌다.

가뜩이나 경제 위기 때문에 힘든 처지에 미국의 이란 압박으로 석유 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은 물가 상승으로 한국 노동계급과 민중이 겪을 고통은 배가될 것이다.

또한 이라크·아프가니스탄의 참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미국이 활개치고 다니는 것은 전 세계 민중의 삶에 악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한국의 이란 제재 동참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

다용도 악법인 국방수권법

지난해 12월 통과된 미국의 국방수권법은 보통 ‘이란제재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란 중앙은행과 거래하는 나라는 미국의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할 수 없다는 규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계속 교역을 하고 싶다면 이란과 거래를 끊으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방수권법은 미국 제국주의의 오만함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는 지독한 법안이다.

그러나 국방수권법은 이란 경제 제재만을 목표로 한 법은 아니다.

국방수권법은 “반테러” 조항도 있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국 대통령은 테러 용의자로 의심되는 미국 시민을 무기한 감금하거나 고문할 수 있다.

“테러 용의자로 의심”된다는 규정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다.

국방수권법은 이란을 압박하는 수단이자, 미국 내 민주주의를 제약하고 ‘점거하라’ 운동 등 반정부 활동을 탄압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유로존 위기의 해결책은 있는가

강동훈

유로존 위기가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면서 전 세계적인 경제 불안정성은 계속 확대되고 있다.

IMF는 최근 발표한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2012년 유로 지역 성장률을 마이너스 0.5퍼센트로 예상했다. 지난 9월에 1.1퍼센트 성장을 예상한 것에서 무려 1.6퍼센트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이 때문에 세계경제 성장률도 3.3퍼센트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위기의 심화에 대처한다며 1월 30일에 열린 유럽연합(EU) 특별 정상회의는 지배자들의 갈등과 무능력 그리고 정신 분열증을 보여 줬다.

우선, 유로존의 경제 대국인 스페인과 이탈리아까지 번진 위기를 진정시키는 데 필요하다는 유로안정화기구(ESM)의 재원 확대 방안이 무산됐다. 영국 총리 캐머런은 “위기국이 긴축을 할 때 다른 쪽에선 유로화 덕을 본 국가에게 부담을 지우는 행동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독일이 더 많은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독일 정부는 재원 확대 방안에 완강히 저항했다.

위기의 대가를 누가 치를 것인지를 두고 유럽 지배자들 내에서 갈등이 계속되면서 유럽 지배자들은 무능력에 빠지고 있고, 위기는 유럽 금융권 전체로 퍼지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유럽 은행들이 자금을 구하기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2월 말에 있을 유럽중앙은행(ECB)의 특혜성 대출 요청이 지난달보다 갑절 이상인 1조 유로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무능력

반면, 유럽 지배자들은 재정적자를 GDP의 3퍼센트로 제한하는 신(新)재정협약에 다시 한 번 합의했다. 이는 임금·복지 삭감으로 위기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데는 이들 내에 어떤 이견도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그런데 모순이게도 유럽 지배자들은 긴축정책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이 위기를 심화시킨다며 8백20억 유로를 투입해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긴축이 위기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배자들도 스스로 인식하는 것이다.



사진 출처: http://www.ramnet.gr/

새해부터 다시 시작된 그리스 파업. 긴축 반대는 곧 유로존 탈퇴를 뜻하지만, 노동자들이 이를 꺼릴 이유는 없다.

긴축이 위기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킨다는 점은 유로존의 최약체국인 그리스 상황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

그리스 기업들을 더 “경쟁력 있게” 만든다는 임금 삭감, 간접세 인상, 복지 삭감은 그리스 경제를 침체로 몰아넣고, 이는 다시 세수를 줄여 그리스 재정 적자를 늘리고 있다.

이 때문에 그리스는 국제 이자 지급에도 허덕이고 있다. 그리스는 국제 이자만으로 매년 2백억 유로를 내야 하는데, 이는 그리스 정부 예산의 40퍼센트, GDP의 10퍼센트에 이르는 금액이다.

어느 국가도 이런 과중한 부담을 지속할 수 없다. 결국 EU, ECB, IMF 등은 그리스의 부채를 탕감해 주는 협의에 나섰다. 그러나 부채 탕감의 부담도 고스란히 그리스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리스 국채는 이미 80퍼센트나 떨어진 가격에 거래되고 있어 유럽 은행들이나 투기자본들에게는 추가적인 손실이 없을 테지만, 그리스 국채를 대규모로 보유한 그리스 연금기금과 은행들은 큰 타

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EU나 IMF가 지원하는 ‘구제 금융’은 그리스 민중을 구제하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가 계속 이자를 내도록 해 거대 은행과 부자들을 구제하는 데 쓰일 뿐이다.

민중을 위한 디폴트가 대안이다

긴축을 더욱 강화하려는 유럽 지배자들의 시도는 노동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총파업을 벌인 그리스 노동자들이 투쟁을 새롭게 준비하고 있다. 루마니아에서도 긴축을 강요하는 정부에 맞선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이번 EU 정상회담이 열린 벨기에 노동자들도 파업을 벌였다.

그리스처럼 국가 부채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긴축에 반대하는 것은 곧 디폴트(채무불이행)와 유로존 탈퇴를 뜻한다.

물론 그리스의 재정을 확충할 다른 대안은 있다. 예를 들어, 위기를 피해 스위스 은행들로 도피한 그리스 자본이 6천억 유로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런 자본에 과세하면 긴축없이도 부족한 세수를 채울 수 있을 것이다.

EU와 IMF 등 유럽 지배자들은 이런 정책에는 한사코 반대한다. 그러면서 EU 지도자들, 특히 강대국인 독일 정부는 그리스 정부 예산이 EU의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그리스의 주권과 민주주의를 무시하는 주장을 거침없이 하고 있다.

자본주의와 금융의 관계

사람들은 흔히 자본주의 자체보다는 통제되지 않은 금융과 투기가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 있는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하다고 영국의 사회주의자 데이브 세웰이 주장한다.

1980년대에 미국·영국 정부 등은 금융 시장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그 후 주식시장 투기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른바 “실물경제”는 복잡한 주식, 채권, 파생 상품 시장에 압도돼 갔다.

이러한 시장들은 2007년에 붕괴하기 시작했고, 지금의 경제 위기를 촉발했다.

오늘날 은행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해졌는지, 그리고 금융 시장이 나머지 경제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다.

금융이 자본주의를 ‘접수하기’ 이전 시절을 돌이켜 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언제 벌어졌는지에 관해서는 일치된 의견이 없는 듯하다.

무엇이 체제를 바꿨는가? 1980년대의 주식시장 규제 완화 때문이었는가? 1971년 브레턴우즈 협정이 와해된 탓인

가? 아니면 1931년에 ‘금본위제’가 끝났기 때문인가?

금융 부문의 혼돈은 사실 이것들보다 훨씬 오랜 역사가 있다. 1873년 오스트리아 빈 증시의 공황은 20년간 장기 불황을 촉발했다.

금융 호황과 붕괴 과정을 묘사하려고 “거품”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한 것은 1700년대 초의 광란적 투기로부터 거슬러 올라간다.

자본주의의 성장은 항상 왕성한 금융 부문의 창출과 긴밀히 연관됐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금융에 대한 의존성 증대야말로 자본주의 체제의 불가피한 특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금융이 취하는 이윤은 다른 곳에서 생산된 부에서 나온다. 금융은 자본주의적 생산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에 기생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상황은 체제가 금융에 의존해 성장할 때 문제를 낳는다.

마르크스는 개별 자본가들의 이윤은 늘 수 있지만, 투자 대비 총 이윤은 시간

이 지남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이윤율 저하 경향)이 있음을 보여 줬다.

오늘날 많은 대기업들은 이윤을 축적해 어마어마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경제의 구조적 문제들 탓에 그 자금을 수익성 있는 곳에 투자하지 못하고 있다.

이윤율을 회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노동자들을 더 쥐어짜서 더 많은 몫의 부를 자본가들의 이윤으로 돌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위험하다. 노동자들이 반격할 수도 있고, 노동자들이 너무 허약해져서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이윤 창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금융이 바로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용카드, 서브프라임 모기지, 각종 대출 확대가 완충 작용을 한 덕분에 자본가들은 노동자 임금 상승 억제, 공공 주택 매각, 학비 보조금 삭감을 좀더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기업들은 대출과 금융 활동에 더 직접적으로 의존해서 주요 사업에서 줄어드는 수익을 벌충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사인 제너럴모

터스(GM)는 35억 달러의 금융 자산을 굴리는 전문적 금융회사인 GM파이낸셜을 가지고 있다.

2007년에 이르자 가치가 의문시되는 곳에 투자된 ‘독성’ 채무의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 이것이 ‘신용 경색’과 이후의 세계적 위기를 촉발했다.

그러나 이러한 부채는 자본주의 전체의 수익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쌓인 것이었다.

신자유주의적 금융화가 위기를 촉발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 부문의 성장은 언제나 자본주의를 위기로 몰아가는 근본적인 문제들의 결과였지 원인이 아니었다.

개혁주의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은행가들을 제거하거나 그들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전체를 뿌리부터 도려내야 한다.

개혁주의 정치인들은 금융은 생산과 별개이므로 자본주의를 전복하지 않고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대안적 경제 모델들이 인기를 끌 수도 있다. 그러나 금융 시스템이 어떻게 자본주의에서 자라났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러한 모델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유토피아를 실현할 논리 정연한 전략을 제시할 수 없다.

또, ‘국제 금융 자본주의’와 좀더 생산적인 ‘국민’ 자본주의가 서로 충돌한다는 생각은 인종차별주의를 부추기는 데 이용되기도 했다. 그 최악의 사례가 유럽의 반유대주의였다.

자본주의의 온갖 문제들은 생산 영역, 즉 작업장 — 우리가 부를 창출하고 사장이 그 부를 우리한테서 가져가는 곳 — 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체제에 근본적으로 도전해서 부를 되찾을 잠재력이 있다. 1918~19년 독일 혁명 때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이렇게 선언했다. “자본주의의 쇄사슬은 그것이 버려지는 곳에서 끊겨야 한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번역: 정종수



이집트 혁명 1년 “이것은 혁명이니 축하 자리가 아니다”

이집트 혁명의 1주년을 맞아 카이로를 방문한 주디스 오어(영국 <소셜리스트 위커>의 편집자)가 혁명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전한다

이집트 혁명 1주년을 계기로 투쟁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의회가 새로 선출된 지 1주일 만의 일이었다. 무슬림형제단은 새 의회에서 3분의 2를 차지했다. 1월 25일 전 몇 주 동안 이집트 최고군사위원회는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최고군사위원회는 그날[1월 25일] 이집트가 화염에 휩싸일 것이고 사람들이 다치고

죽는 거대한 폭력이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겁먹지 않았다. [지난해] 1월 25일 혁명이 시작된 이래 가장 많은 사람이 이집트 전역에서 거리로 나왔다. 이를 후 수십만 명이 “분노의 날” 1주년을 맞아 다시 거리로 나왔다.

지난해 이집트의 전 독재자 호스니 무바라크를 끌어내리는 데는 겨우 열 여드레

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주[1월 다섯째 주]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 혁명이 계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외친 구호는 군부를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내용이었다.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혁명을 만들었다. 이제 그들은 혁명을 군부한테서 되찾기를 바란다.

새로 선출된 의회를 둘러싼 긴장도 표면에 떠올랐다. 지난주[1월 넷째 주] 시위 동안 카이로 타흐리르 광장에서는 범상치 않은 광경을 볼 수 있었다.

사람들은 무슬림형제단의 연사들에게 आय을 보냈고 신발을 던지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들은 무슬림형제단이 원칙을 저버리고 군부와 타협했다고 비판했다.

무슬림형제단이 새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것은 무슬림형제단의 뿌리가 깊고 광범한 지지를 받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온갖 모순을 자아낸다. 새 의회는 이번 주 월요일[1월 30일]에 업무를 막 시작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이미 실망하기 시작했다.

무바라크를 타도한 타흐리르 광장의 18일 동안 핵심 구호는 “자부심을 가져라, 당신은 이집트인이다”였다.

금요일[1월 27일] 시위에 이 구호는 무슬림형제단에 반대하는 구호로 바뀌었다. 시위대는 “자부심을 가져라.

당신은 의자[국회 의석]일 뿐이다” 하고 소리쳤다. 즉, 무슬림형제단이 혁명을 팔아 의석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원통해 하며 신발을 던지고 맨발로 행진을 계속했다. “이것은 혁명이니, [국회 의석] 잔치가 아니다.”

한 연사가 모든 이집트인은 “같은 편이다” 하고 말하며 군중을 진정시키려 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예전 일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군중은 맞받아쳤다. “우리는 절대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무슬림형제단이 쿠란 경구를 외며 군중을 진정시키려 했을 때, 한 시위 참가자가 방송 시설의 전원 플러그를 뽑아 버렸다. 이는 전례없는 일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여전히 새 의회가 어느 정도 개선을 가져다주리라고 기대한다.

이집트의 경제 위기는 심각하다. 이집트는 세계 최대 밀 수입국이다. 식료품은 대부분 수입되고 미국 달러로 결제된다. 그래서 외환보유고가 날이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여기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부를 재분배하고 국제 통화기금(IMF) 채무 상환을 중단하고 부자들에게 더 많

은 세금을 걷는 것이다. (재)국유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인기가 있다. 사람들은 원래 자신들의 것을 되찾고 싶어 한다.

이스라엘과의 관계나 IMF와의 거래를 어떻게 처리할지의 문제도 존재한다. 무슬림형제단 지도부 내에는 이런 문제들에 관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 충돌이 있다. 무슬림형제단 지도부와 기존 지지자들 사이에 균열이 커지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상황은 유동적이다. 지난주[1월 넷째 주] 대중 시위들은 중요했다. 더 많은 사람이 참가했고 그들을 투쟁으로 이끌었다.

“타흐리르 광장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광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광장을 점거한다고 승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주의자 활동가인 디나가 말했다. “광장과 광장은 같은 편이다” 하는 구호가 그토록 중요한 깨달임이다.”

새로운 정치적 행동들은 노동자들에게 싸움 자신감을 줬다. 이번 주[1월 마지막 주] 시위들은 노동자들에게

게 투쟁에 나설 자신감을 줄 수 있다.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의 한 회원이 노동자 운동의 효과에 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주[1월 넷째 주]에 항만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였습니다. 노동자들은 주요 고속도로를 점거했습니다. 노동자 수천 명이 도로를 점거하고 최고군사위원회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많은 노동자가 지난해 8~9월 파업 물결에 참가했고 많은 약속을 따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들은 아직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만간 노동자들이 다시 행동에 나서리라고 생각합니다.”

판돈은 매우 크다. 사람들은 무바라크를 대체한 정권이 혁명을 주저앉히려 하는 것을 봐 왔다. 그래서 군부에 대한 반감이 무척 강하다.

사회주의자들은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들 자신도 바뀔 수 있다고 항상 말해 왔다. 이것이 지금 이집트에서 일어나고 있다.

출처 영국군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288호 번역 차용함

이집트 혁명가들의 눈부신 활약과 성장

모하메드는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RS) 회원으로 사회주의 신문을 편집하고 있다. 그가 영국 <소셜리스트 위커>의 편집자 주디스 오어에게 이집트 혁명에서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이 어떻게 조직하고 활동하는지를 말한다.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는 현재 진행 중인 이집트 혁명에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단체의 인지도는 규모보다 훨씬 크고 회원이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다. 북부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남부의 아스완까지 신임 회원 수백 명이 가입했다.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는 주간 신문 <사회주의자>를 발행해 혁명 속에서 조직화를 돕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들은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과 여러 광장에서, 작업장과 대학에서, 알렉산드리아와 수에즈 같은 도시에서 신문을 판매한다. 카이로의 모든 지역에서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의 웹사이트와 단체의 핵심 주장을 선전하는 낙서들을 볼 수 있다.

집권 최고군사위원회는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회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회원 일부는 국가 전복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의 발단은 한 무슬림형제단 회원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을 고소한 것이었다. 회원 일부는 국가 전복을 선동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정권이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을 위협한 바로 다음 주에 발행된 <사회주의자>의 표제는 “우리는 혁명을 구하기 위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였다. 이 신문에 다른 단체 활동가들이 보낸 지지 메시지가 실렸다.

모하메드는 혁명 동안 이 신문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이렇게 설명했다. “우리는 2006년에 신문을 창간했습니다. 2006년부터 혁명 때까지 총 49호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나 호스니 무바라크 정권이 타도된 뒤부터 지금까지 35호를 발행했습니다. 신문은 한 면으로 시작해 네 면으로 증

편됐고, 이제는 여덟 면으로 발행됩니다. 어떤 때는 12면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문을 보통 1천~2천 부 발행합니다. 혁명 1주년인 1월 25일에는 5천 부 이상을 인쇄했습니다.”

<사회주의자>는 혁명과 함께 발전했다. 그러나 모하메드를 포함한 이집트 혁명적사회주의자단체 회원들은 그 이상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기존 활동가들뿐 아니라 새로운 독자, 학생, 노동자 등을 획득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독자들이 이 신문을 자신들의 신문이라고 느끼고 우리에게 소식과 기고문을 보내기 바랍니다.”

모하메드는 이 신문에 어떻게 이집트의 계급 분단을 폭로하는지 설명했다.

“우리는 지배자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짓들을 폭로하고자 합니다. 부자들은 이집트 혁명이 자신들의 삶을 망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이로의 부유한 지역인 자말레에 있는 한 아파트가 1천6백만 이집트 파운드에 팔렸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사람들은 이 기사를 읽으며 ‘부자들의 삶은 어찌 망치지 않았군’ 하며 비웃었습니다.”

혁명이 시작되기 몇 개월 전에 <사회주의자>는 팔레스타인과 이라크 전쟁 문제를 집중 보도했다. 또, 아랍 세계 전역의 노동자 투쟁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모하메드는 머지않아 이집트 혁명을 포함해 아랍 혁명들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지난해 1월 24일 나는 한 고참 활동가에게 튀니지에서 벌어진 일이 이곳에서도 벌어질 거라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수심 년을 공산주의자로 살았습다. 그는 아니라고,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 뒤부터 무바라크를 퇴진시킨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출처 영국군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288호 번역 차용함

시리아 혁명의 확산을 막으려는 정권의 발악

시리아 혁명이 권력 중심지로 확산되자 시리아 정권이 야만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주(1월 중순) 광범한 시리아인들이 자유시리아군(FSA)의 지원을 받으며 수도 다마스쿠스 교외의 노동자계급 거주지를 바사르 알아사드 대통령의 통제로부터 해방시켰다.

이 지역은 다마스쿠스 중심지에서 5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다. 시리아 투쟁이 정권의 핵심에 매우 가깝게 다가선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일요일(1월 29일) 시리아 정권은 엄청난 공격을 감행해 이 지역을 탈환했다. 아사드는 탱크와 장갑차 50대, 무장 군인 2천 명을 이 지역으로 보냈다.

이점요

시리아 활동가들은 시신들이 거리에 쌓여 있다고 보도했다. 정부군은 비무장한 시위 참가자들이 저항하자 총격을 가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위대 참가자들이 정부군을 물러나게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전술적 후퇴를 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주말 순교자들의 장례식이 50건 이상 열렸다. 이 장례식들의 행렬은 거리를 행진하며 억압에 저항하고 있고 저항이 시리아의 더 많은 지역, 특히 정계 중심지들로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이 운동은 시리아 상업의 중심인 알레포의 노동자계급 지역 마르자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이 점은 매우 중요해 아사드가 우려하고 있다. 그는 권력을 놓지 않으려 발악하고 있고 저항이 시리아의 더 많은 지역, 특히 정계 중심지들로 확대되는 것을 두려워한다.

아사드는 또한 모든 저항을 파괴하고 싶어 하는데, 이는 오히려 더 많은 저항을 낳고 시리아 정권의 폭력에 대한 국제적 우려를 심화시킬 수 있다. 아랍연맹 감시단도 “심각한

상황 악화”를 이유로 들면서 철수했다.

시리아 항쟁은 압축 진영에 속한 소수 병력들이 충돌하는 일방적 의미의 군사 전투가 아니다. 수백만 명이 반정부파에 동조하고 있다. 지역조정부위원회(LCC)가 기존에서 사람들을 조직하면서, 특히 파업 투쟁을 지지하면서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반면 서방과 가깝고 서방의 개입을 지지하는 (반정부, 망명자 단체) 시리아국가위원회(SNCO)는 점점 고립되고 있다.

정부군 탈영병 등으로 구성된 자유시리아군(FSA)이 갈수록 더 큰 구실을 하고 있다. 자유시리아군은 정부의 공격들로부터 지역을 방어하는 데서 핵심적 구실을 한다. 일부 지역에서는 자유시리아군이 지역조정부위원회와 함께 활동한다.

일부에서는 시리아의 저항이 서방에 의한 ‘음모’ 중 하나라거나, 이 투쟁의 승리가 서방 제국주의를 도와줄 것이라고 말한다. 이는 위험한 주장이다.

질식

시리아 정권은 좌파나 저항세력의 친구가 아니다. 이 정권은 2003년 이후 이라크의 민중의 저항을 질식시켰고 다른 투쟁들을 억압했다. 서방 지도자들과 아사드에 저항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된 이해관계도 없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1월 31일 시리아 경제 제재에 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프랑스와 다른 국가들은 아사드 정권에 대한 제재와 각종 조처를 강화하려 한다. 그러나 서방과 서방의 동맹들의 ‘지원’은 평범한 시리아인들을 결코 해방시킬 수 없다.

시안 루트

출처 영국군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커> 2288호 번역 차용함

티베트인들의 반란을 지지하라

한국에서도 중국의 티베트 유혈진압에 항의하고 티베트인들의 반란을 지지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다음 행동은 2월 8일 오후 7시 서울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다. 최근 소식과 일정을 티베트 연대 운동 단체 랑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랑젠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rangzenkorea

1월 말 중국 쓰촨(四川)성 티베트 자치주에서 중국군이 티베트인 시위대에 발포하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세 명이다.

중국 정부의 언론 통제가 심하지만 일부 언론들과 티베트 망명 단체의 보도를 보면, 지난 2008년 라싸 항쟁 이후 가장 심각한 상황인 듯하다.



2월 1일 중국 대사관 앞에서 열린 항의 기자회견

2008년 3월 10일 티베트의 주요 도시 라싸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한 1959년 봉기 49주년을 기념해 라마교 승려들이 주도한 평화적인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나 중국 정부가 시위를 폭압적으로 진압하고 티베트인들의 분노가 폭발하면서 대중 항쟁으로 발전했다. 티베트 망명자들은 중국 경찰의 발포로 1백 명 이상이 죽었다고 말한다.

중국 정부는 2008년 이후에도 억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2009년 또 다른 중국 식민지인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위구르인들의 반란이 발생하자 중국 정부는 소수 민족들의 움직임을 더 강하게 통제했다. 특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종교 사원에 대한 통제가 강했다.

그래서 지난해부터 티베트 라마교 승려 16명이 중국 정부의 탄압에 항의해 분신했다.

1949년 민족해방 운동을 통해 집권한 현 중국 공산당 정부는 모순되게도 티베트와 신장 등 주요 소수 민족 거주 지역을 강제로 점령했다.

티베트에서 이에 맞선 저항은 1959년 3월 항쟁 때 절정에 달했다. 중국군은 티베트인들을 공격했고, 달라이 라마를 포함해 티베트인 5만 명이 인도로 망명했다.

중국 정부는 티베트에서 본격적 식민 통치를 시작했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 전통 작물 재배를 금지하고 티베트의 기후와 맞지 않는 곡류 재배를 강요해 1960년대 초 기근이 광범하게 발생했다.

얼마 뒤 ‘문화혁명’ 동안 많은 수의 티베트 문화·종교 유적이 파괴됐다. 전통 복장을 입은 사람들이 공격당하기도 했다. 당시 불교 사원이 90퍼센트 이상 파괴됐다.

오늘날 티베트인은 한족과 견줘 일자리, 의료, 주거, 교육 등 거의 모든 중요 분야에서 차별 받는다. 티베트 청년 실업률은 70퍼센트에 달한다. 중국 정부는 2007년에만 무려 티베트인 25만 명을 강제 이주시켰고, 그 비용을 티베트인들이 부담하게 했다.

중국 정부가 티베트 지배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이 지역에 우라늄과 수자원 등 천연자원이 풍부해 인도·네팔·버마 등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군사 요충지이기 때문이다. 티베트의 독립을 허용하면 다른 소수 민족들의 독립 요구가 빗발칠까 봐 중국 관료는 두려워한다.

티베트 문제에 대해 지난 60여 년 동안 중국 정부가 취한 정책은 다른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지 정책과 다르지 않다. 이는 중국 국가가 사회주의이기는커녕 제국주의 열강의 하나임을 보여 준다.

김용욱



2011년 11월 반군부 시위위. 2012년 1월 25일 이집트혁명 1주년 기념 시위(가운데). 2012년 1월 27일 “분노의 날” 1주년 기념 행진(아래)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이끈 볼셰비키당은 1백 년 전 1월에 창당했다. 이 당은 하루아침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볼셰비키는 멘셰비키와 결별하면서 탄생했다. 원래 볼셰비키는 멘셰비키와 함께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RSDLP) 내 양대 분파였다.

멘셰비키는 사회주의 정당이란 노동자들 사이의 정치적 차이에 상관 없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라는 당시의 '상식'을 고수했다.

그러나 볼셰비키의 핵심 지도자인 레닌은 당에 관해 사뭇 다르게 이해했다. 그의 정당 모델은 노동계급 내에는 정치적 양극단 — 혁명적 정치에서 반동적 정치까지 — 이 존재하며 대다수 노동자는 이 둘 사이의 어딘가에 위치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했다.

따라서 어떤 노동자들은 인종차별주의적 사고를 가질 수 있지만, 다른 노동자들은 원칙적인 반인종차별주의자일 수 있는 것이다. 레닌은 혁명 조직이 가장 선진적 생각을 가진 노동자들을 결집해야 하며, 그에 바탕을 두고 다른 노동자들을 설득하고 연대·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의견 대립 문제를 해결하려고 1912년 1월 프라하에서 특별 당대회를 소집했다. 멘셰비키들은 배제됐고 대회는 새로운 중앙위원회를 선출했다. 이 위원회는 노동자들 사이에서 선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새로운 일간지 〈프라우다〉를 창간했다.

이 분열은 10여 년에 걸쳐 발전한 심각한 정치적 차이의 결과였다. 특히, 볼셰비키와 멘셰비키는 1905년 혁명의 실패에서 완전히 다른 결론을 이끌어 냈다.

볼셰비키는 1905년 혁명이 혁명 조직의 필요성을 증명했다고 봤다. 세력균형을 바꾸기 위해 투쟁에 개입하고 노동자들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정당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반대로 멘셰비키는 혁명 패배 이후 허용된 협소한 정치 공간에서 활동하고 두마(의회)에 선출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물론, 볼셰비키는 합법적 정치 활동의 필요성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볼셰비키는 합법적 정치 활동이 비합법 영역의 혁명 활동보다는 덜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볼셰비키는 1905년 등장했던 소비에트(노동자평의회)의 엄청난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고양기

몇 년 뒤 노동자들의 저항이 뜨겁게 분출하자 볼셰비키와 멘셰비키 사이의 갈등이 더 첨예해졌다.

1912년 4월 레나 광산의 파업 노동자 5백 명이 학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전국의 노동자들이 크게 분노했다. 곧 시위와 파업 등이 사방에서 일어났다. 이런 활동에 참가한 사람들은 정치수에 대한 사형과 고문 폐지 등 매우 정치적인 요구를 내걸었다.



볼셰비키 탄생 1백 년

러시아에서 볼셰비키가 탄생한 지 1백 년이 됐다.

영국의 사회주의자 **줄리 세리**가 볼셰비키가 혁명 조직으로 탄생하게 된 계기를 살펴본다.

멘셰비키식 전략의 약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멘셰비키 의원들이 두마에서 레나 학살에 항의하자 정부 관료는 통명스럽게 답했다. “이미 일어난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노동자들은 빈곤, 착취, 억압에 반발해 자생적으로 투쟁에 나섰다. 그러나 1917년 혁명이 성공한 것은 그런 투쟁이 의식적으로 조직됐기 때문이었다.

볼셰비키는 모든 곳에서 가장 능동적인 투사들을 끌어낼 수 있는 종류의 당

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여기서 볼셰비키가 ‘민주적 중앙집중주의’ 정당을 건설한 것이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즉, 모든 당원은 당의 정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공개적이고 솔직한 논쟁들에 참가할 수 있고, 논쟁을 통

RSDLP의 궤적

1898년 결성된 러시아사회민주노동당(RSDLP)은 러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던 혁명가들을 모았다. 이 당의 창당 강령은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세력으로서 노동계급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후 노동자 운동이 성장하자 RSDLP 내부의 정치적 차이가 부각됐다. 1903년 당원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둘러싸고 RSDLP는 두 개의 분파로 분열됐다. 볼셰비키는 당원이란 당의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가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멘셰비키는 당을 지지하는 사람을 당원으로 규정했다. 당시 이 논쟁은 기술적 문제에 관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논쟁은 사회주의자들이 어떤 정당 — 당원들이 수동적인 큰 정당이냐, 아니면 당원이 모두 지도자인 정당이냐 — 을 건설할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 갈등이 1912년 분열을 낳은 씨앗이 됐다.

해 어떤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당원이 이 결정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다.

민주적 중앙집중주의 덕분에 볼셰비키 당원들은 자기 경험을 토론에 반영시킬 수 있었고, 당의 전략을 결정하는 기초가 되는 현장의 분위기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모든 당원이 민주적 결정에 책임을 지기 때문에 혁명 정당은 운동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실수로부터도 더 잘 배울 수 있다.

혁명 정당에서는 모든 당원이 자기 작업장에서 리더가 돼야 한다. 모든 당원이 당의 정책을 실천할 의무가 있다.

볼셰비키는 혁명 정당이 노동계급으로부터 배워야 하며 치열한 계급투쟁의 과정에서 당이 성장할 수 있음을 이해했다.

혁명 정당의 구실은 완성된 ‘위대한 사상’을 ‘무식한’ 노동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다. 혁명 정당은 노동자들이 스스로 창조한 것들 중 최상의 것을 취해 그것을 확산(일반화)하려 노력하는 것이다.

물론, 볼셰비키들은 많은 실수를 저질렀다. 심지어 1917년 혁명의 와중에도 실수를 범했다. 당시 볼셰비키는 정치 환경이 급격히 변하는 와중에서 혼란을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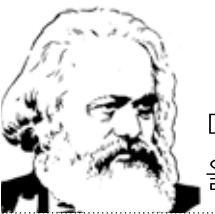
자본주의 정부가 여전히 존재하지만 동시에 노동자들이 민주적인 대안 기관을 건설하기 시작한 ‘이중 권력’ 상황에서 당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놓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다.

이런 논쟁들을 벌인 덕분에 볼셰비키 당원들은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끊임 없이 정세와 당의 정책과 활동을 평가할 수 있었다.

그들은 러시아 혁명의 성공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했다. 이런 혁명 정당 없다면, 우리는 역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전투들의 성패를 운에 맡기게 될 것이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2287호
번역 김용욱

부의 축적과 빈곤의 축적



마르크스가 옳았다 ①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그리고 최근의 유로존 위기까지 세계 경제는 심각한 위기를 거듭하고 있다. 다른 한편 아랍 혁명, 월가 ‘점거하라’ 운동 등 세계 곳곳에서 저항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누리엘 루비니 교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마르크스가 옳았다’ 하고 말한다. 마르크스의 분석과 통찰에서 어떤 측면이 옳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감과 과제를 던져 주는지 연재를 시작한다.

날품팔이로 생계를 이어가던 쌍용차 해고 노동자가 세상을 떠났다. 벌써 스무 번째 죽음이다. 그런데 이 소식과 나란히, 국내 상류층을 타겟으로 한 최대 10억 원짜리 초호화 스키장 ‘소노펠리체’의 분양권이 출시 1년 만에 다 팔려 나갔다는 소식도 들려 왔다. 긴 말을 할 것도 없이 (한나라당조차 “경제 민주화”를 얘기할 만큼) 한국 사회는 끔찍하게도 불평등하고 불공정하다.

‘워킹 푸어’라는 말이 보여 주듯, 이제 노동자들은 일하면 할수록 더 가난해진

다고 느낀다. 젊은 사람들은 결혼, 출산, 연애를 포기했고, 나이드 사람들은 다만 빛이 대물림되지 않기만을 바란다. 가난에 직면한 많은 노인들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다.

평범한 사람들이 해고, 저질 일자리, 물가 폭등, 늘어나는 가계 빚에 허덕이는 동안, 최근 삼성·현대자동차·에스케이·엘지 같은 거대 기업들은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이 거대 자본들은 2008년 경제 위기 이후 오히려 매출이 연 평균 16퍼센트씩 증가했다.

몇 가지 통계를 보자. 최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를 보면, 한국의 전체 순자산 중 47.2퍼센트를 상위 10퍼센트가 차지한다. 반대로 하위 50퍼센트가 보유한 순자산은 전체의 8.9퍼센트밖에 안 된다. 최하위 10퍼센트는 빛이 더 많다.

또, 지난 10년 동안 소득불평등이 더 심해졌다. 종합소득세 상위 20퍼센트와 하위 20퍼센트 간의 1인당 소득 격차는 1998년 17.7배에서 2009년 45.5배로

1백50퍼센트 이상 크게 늘었다.

이런 불평등과 가난은 전 세계적 현상의 일부다. 현재 미국에는 정부가 제공하는 무료 식권에 의존해 살아가는 빈곤층이 4천5백만 명(미국인 6명 중 1명)이나 된다. 그런데 세계적 미디어 그룹인 비아콤의 경영진 3명은 지난해 5백17억 원 어치 보너스를 챙겨갔다. 그것도 현금으로만! 미국에서 상위 1퍼센트가 보유한 순자산은 일반 가정 순자산의 무려 2백25배다. 제3세계의 사정은 더 참혹하다.

» 11면으로 이어짐

99퍼센트의 삶을 지키는 투쟁

KTX 민영화를 막아내자!

KTX민영화가하이스루떠오르고있다.

벌써부터 국민의 70퍼센트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60여 개 노조·시민 사회·정당 등이 참가한 역대 최대의 민영화 반대 대책위(KTX 민영화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가 구성됐다. 철도 노조가 시작한 KTX 민영화 반대 서명에도 “대전에서만 하루 1천 명이 넘게 참여”할 정도다.

이것은 정부·여당에 상당한 압력을 넣었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비대위조차 “서두를 일이 아니”라고 나서면서, KTX의 수서-경부·호남선 신규 노선 운영권 매각은 종선 이후로 연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결코 KTX 민영화 계획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명박은 최근에도 장·차관 들을 불러 놓고 “선거철 포퓰리즘을 경계하라”면서 “자리를 걸고 정책을 지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토해양부는 직원들을 강제 동원해 ‘민영화 찬성 댓글 달기’에 나서 눈총을 사기도 했다.

KTX 민영화에 이명박 측근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얘기다. 그러나 정부의 민영화 정책 추진에는 일부 개인들의 탐욕뿐 아니라, 한국 지배계급 전체의 이해관계가 중심에 있다.

지배자들은 깊어지는 경제 위기 속에서 위기의 비용을 평범한 노동자·민중에게 떠넘기려 한다. 정부가 복지 축소, 비정규직·해고 확산, 민영화 등을 낳을 한미FTA를 강행한 것은 이 때문이다.

KTX 민영화는 바로 이런 신자유주의 정책의 일부다. 정부는 KTX 신규 노선 매각을 시작으로 그동안 제동이 걸린 민영화 정책에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한다. 최근 청주공항이 매각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정부는 2008년 위기 이후 재벌·기업주들에게 온갖 혜택을 제공하며 재정 위기를 심화시켜 왔다. 이 속에서 민영화는 일시적으로 재정난을 타개할 실용적 수단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해당 노선을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들려고 제공하는 특혜와 보조금은 결국 국민의 혈세에서 충당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한겨레>는 “정부가 ‘적정 수익’을 보장하는 완전한 특혜 사업”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민영화는 노동계급에게 고통을 전가할 조건과 이데올로기를 만들 지렛대 구실을 할 것이다.

최근 코레일 측은 KTX 민영화 논란의 틈을 이용해 ‘경영 효율’을 내세우며 인력 감축과 외주화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기업 효율을 위해 노동자 희생도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전파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 정부의 민영화 예찬론은 공공·복지 확대를 바라는 대중의 요구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고, 더 넓은 부문에서 구조조정 드라이브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정부는 철도 산업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 공기업 독점으로 인한 “방만한” 경영과 “비효율”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해외의 철도 민영화 사례는

효율성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을 보여줬다. 민영화 이후에도 지급됐던 정부 보조금의 상당 부분은 기업주들의 배를 불리는 데 쓰였고, 시설·안전 투자는 터무니없이 줄어 끔찍한 재앙만 불렀다.

영국에선 철도 민영화 이후 정부 재정 부담이 오히려 네 배 넘게 증가했고, 56명의 인명을 앗아간 대형 사고가 다섯 번이나 발생했다.

국토해양부가 최근 모범으로 내세우는 일본에서도, 안전 장비 부족과 과속 부추기기 탓에 2005년 열차 탈선 사고로 1백7명이 죽고 4백50명이 다치는 대형 참사가 벌어졌다. 노동자들은 무려 7만7천여 명이 해고되는 고통도 겪어야만 했다.

재앙

정부는 최근 민영화에 따른 요금 인상 우려가 커지자, “요금이 인하되지 않으면 KTX 민영화를 포기하겠다”며 “경쟁이 요금을 낮출 것”이라고 호언장담한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즉각 “돈벌이가 목적인 민간 기업들이 손해를 감수하면서 요금 인하에 동참할 리 없다”고 반박했다. 한국통신이나 해외의 민영화 사례에서 나타난 요금 인상을 떠올려 봐도 정부의 호언장담이 알팍한 거짓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정부는 노골적으로 “인건비 20퍼센트만 줄여도 요금을 20퍼센트 인하”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KTX 민영화를 설득해 보

려는 정부의 논리는 반발에 부딪히고 있고, 정부가 개최한 토론회들은 “요식 행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민영화 반대 목소리는 점차 커졌고, 정부 민영화 정책은 거듭 가로막혔다. 집권 초기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 정책을 쏟아냈지만, 최근 인천국제공항에 이르기까지 정부 정책은 거듭 좌초됐다.

거슬러 올라가 2008년 촛불 운동에서 시작해 한미FTA 반대 운동으로 이어진 저항이 민영화에 제동을 건 원동력이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말기 이명박 정부가 꺼내든 민영화 카드는 정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민영화 문제가 반발로 꼬일 경우, 임기말 권력누수를 가속화하는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썼다.

따라서 지금은 정말 싸워볼 만한 때다. 지난 몇 년간 정부의 집중 탄압과 통제 속에 신음한 철도 노동자들도 다시 한 번 기지개를 켤 수 있는 기회다.

반갑게도, 철도노조는 KTX 민영화를 막겠다고 앞장섰다. 2월 4일 수천 명 규모의 대규모 집회를 열고 3월 26일 범대위 단체들과 함께 더 큰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철도노조, 민주노총, 범대위는 광범한 사람들을 결집해 운동의 힘을 더 키워야 한다. 이명박 정부가 종선 이후 민영화 추진을 고집한다면, 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벌일 준비도 시작해야 한다.

소은하

《탈선》서평

영국 철도 민영화의 재앙과 교훈



《탈선》
앤드루 머리 지음 | 오건호 옮김
이소출판사 | 270쪽 | 1만2천 원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KTX 민영화는 이미 영국에서 파산한 철도 민영화의 재앙을 떠올리게 한다.

영국 철도기관사노조의 앤드루 머리는 2001년에 쓴 《탈선》에서 민영화의 폐해를 생생하게 고발했다. 이 책은 대형 참사, 요금 인상, 서비스 질 저하, 대량해고 등으로 점철된 영국 철도 민영화의 폐해를 생생하게 폭로한 증언서다. 저자는 기관사, 역무원, 선로 보수 노동자, 철도 이용객 등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 “공공 철도로 되돌아가자”고 강력하게 설득한다.

영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꼭 마찬가지로 “경쟁”과 “효율성”을 들먹이며 1995년부터 1997년까지 철도 산업을 1백여 개로 쪼개 분할 매각했다.

그러나 “효율성”을 좇은 결과는 참혹했다. 민영화가 완료된 첫 해 열차 충돌 사고가 발생해 7명이 목숨을 잃었고, 2년 뒤 또다시 31명이 사망했다. 2000년 10월 햇필드에서 발생한 대형 탈선 사고는 민영화의 폐해를 만천하에 드러내며 뜨거운 논쟁을 야기했다. 이 사고로 5명이 희생됐고, 몇 달 동안 철도 시스템 전체가 마비됐다. 그리고도 2002년에 또다시 탈선 사고가 발생해 7명이 사망했다.

이 모든 일들은 이윤에 눈이 먼 기업주가 선로 유지·보수 등에 돈을 쓰지 않아 발생했다. 이들에겐 평범한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보다 돈벌이가 우선이었다. 공공의 이익을 민간에 팔아넘긴 민영화 논리가 뜻하는 바는 바로 이것이었다.

이명박 정부는 민영화로 경쟁이 도입되면 요금이 떨어진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영국 정부도 써먹은 뻔뻔한 거짓말일 뿐이다. 영국에선 철도 민영화 이후 2년 만에 요금이 14퍼센트나 올랐다.

더구나 영국 정부는 철도 민영화 이후에도 이전보다 더 많은 보조금(세금)을 철도 민간 기업들에 지급했고, 이것은 기업주들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됐다. 기업주들은 주주들에게 엄청난 배당금을 지급하며 배를 불렀고, 이로 말미암아 생긴 부채를 정부에 떠넘겼다.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저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명쾌한 해법을 내놴다. 그것은 바로 민영화된 철도를 재국유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2002년 10월, 철도 민영화의 상징이던 시설주식회사 레일트렉은 파산에 이르렀고, 영국 정부는 레일트렉을 재국유화했다. 이것은 영국 철도 민영화 정책의 파산을 뜻했다.



사진 출처: Kelly, B. Huston(flickr.com)

민영화는 미친 짓이다 1백50여 명의 사상자를 낸 2008년 미국 메트로링크 열차 사고, 이윤을 최우선하는 민영화 논리가 이런 끔찍한 악몽을 재현할 수 있다.

》10면에서 이어짐

지난해 월가를 ‘점거하라’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배경에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실이 있었다.

일찍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가 1퍼센트의 배만 불리고 99퍼센트는 빈곤의 늪으로 빠뜨리는 현실을 목도했고, 그 이유를 분석하려 했다.

《공산당 선언》에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일하는 사람들이 아무 것도 얻지 못하는 반면, 무언가를 얻는 자들은 일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가들은 일하지 않고서도 엄청난 부를 쌓을 수 있다. 공장·기계·건물 등 생산수단을 소유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생산수단을 독점한다는 이유로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생산할지 등을 결정하고, 거기서 나오는 잉여를 획득한다.

당연히 노동자들은 이런 권한이 없다.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에게 자신의 노동력을 판매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방법이 없다.

한편, 자본주의에서 생산은 자본들 간의 경쟁을 바탕으로 조직된다. 새로운 기

술과 기계를 도입해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쳐지고 파산할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은 끊임없이 축적하라는 압박에 시달린다. 노동자들을 가능한 한 많이 쥐어짜야 할 필요성도 여기서 생긴다.

“축적을 위한 축적, 경쟁을 위한 경쟁”이 지상 최대 과제가 되고 모든 것은 이윤 추구에 종속된다. 여기에 노동자들의 필요와 요구는 껴들 틈이 없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한편에서는 부의 축적이, 다른 한편에서는 빈곤의 축적”

이 공존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자본주의 체제는 경쟁 압력 때문에 부단히 생산성을 혁신한 결과 생산력을 놀랄 만큼 발달시켰지만, 생산의 목적이 이윤 추구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과 자원들이 다수 대중의 필요를 위해 쓰이지 못하게 됐다.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식량이 모자라서 배를 곯았다면, 자본주의는 식량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이 굶주리는 정신 나간 체제다. 최근 한국에서도 소 값 폭락으로 농민들은 멸절할 소를 굶겨 죽여야 하는 판국인 반면, 일부 사

람들은 여전히 쇠고기가 비싸서 사 먹을 엄두를 못 내고 있다.

따라서 생산수단을 독점한 자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고 생산을 결정하는 한 끔찍한 빈곤과 불평등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지긋지긋한 현실에서 벗어나려면, 태생적으로 불평등한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 노동자들이 민주적이고 집단적으로 생산을 결정하고 사회의 부를 인류의 삶을 향상하는 데 쓸 수 있는 새로운 생산 체제가 필요하다.

이현주

영화 <부러진 화살>과 파장

추악한 사법권력과 공범들을 향한 분노

이광열 구속노동자후원회 사무국장

영화 <부러진 화살>이 흥행 돌풍을 일으키면서 커다란 사회적 반향을 낳고 있다. 잘 만든 영화여서 그럴 테지만, 극장으로 발길을 옮기는 많은 사람들의 심정은 영화 너머에 있는 잘못된 현실을 바꿔 보고 싶은 마음이라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이 영화를 봤다. 또, 영화 속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 교수의 고난을 몇 년간 옆에서 지켜본 한 사람으로서 이번 계기로 진상이 밝혀지고 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 언론은 여전히 이 사건을 “석궁 테러 사건”이라고 부르며 김 교수한테서 테러리스트의 오명을 벗겨 주지 않는다.

내가 처음 김 교수를 만난 것은 2007년 9월 성동구치소에 면회 가서였다. 그때는 이미 ‘석궁 사건’이 일어난 지 8개월이 흘렀고 1심 재판이 막바지로 가던 때였다. 그는 재판이 파행으로 흐르고 검사가 ‘살인 미수죄’로 징역 10년을 구형하자, 법정 출석이 더는 의미없다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단식은 32일 동안 계속됐다. 실신해서 병원으로 실려 가셔도 멈추지 않았다. 그러자 교도관과 의사들이 손발을 묶고 강제로 링거를 투입했다. 그때 나는 그의 무죄를 확인했다.

무죄

김 교수는 서울대를 나와 미시간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 사회의 이른바 ‘엘리트’였다. 그는 세상이 법대로만 돌아가면 아름다워지리라고 믿던 보수적인 사람이었다. 그런 그에게 한국의 대학 사회는 건디기 어려운 시련을 안겨 줬다.

자존심 강하고 원리 원칙 따지는 그는 공정해야 할 입시 고사의 오류를 적당히 덮어 버리는 사태에 치를 떨었다. 그의 정당한 문제 제기가 올바르게 처리됐다면

‘석궁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헌법은 “교원 지위 법정주의”를 규정하고 있지만 구 사립학교법에는 교원 재임용 절차와 관련된 규정이 없었다. 사학 재단은 이 악법을 이용해서 마음에 안 드는 간간한 교수들을 멋대로 교단에서 쫓아냈고, 김 교수도 1996년에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2003년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 이후 2005년에 사립학교법이 개정되긴 했지만 재단이 마음대로 임용권을 휘두를 수 있게 보장해 주는 내용은 남았고, 이것을 근거로 사법부는 성균관대학교 재단(삼성)의 손을 들어 줬다.

이런 결정을 내린 판사들 가운데 일부는 재단의 대리인을 맡은 변호사들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일했거나 학교 선호배사이였다.

그래서 김 교수의 투쟁은 이제 “법을 고의로 무시하는 판사들”과의 ‘전쟁’으로 변져 갔다. 김 교수는 재판 기간 내내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감행했다. 판사들의 이름을 공개 거명하면서 규탄했다. 그 덕에 가뜰이나 권위적인 판사들은 패색하게 여겼지만, 김 교수는 수많은 사법 피해자들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사람들은 김 교수의 용기 있고 거침없는 투쟁에 박수를 쳤다.

나는 김명호 교수 석방대책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그를 지지하는 사법 피해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덮고 누명을 날조한 법조 권력에 적개심을 드러냈고, 일부는 차가운 거리에 나와 사회적 관심을 호소했다.

김 교수가 석궁을 가지고 박홍우 판사의 집을 찾아간 행위를 정당한 ‘국민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하는 데는 이런 배경이 있다. 석궁을 가지고 건 건 일종의 시위였고, 김 교수는 박홍우 판사뿐 아니라

부조리한 사법부 전체에 경종을 울리고 싶었던 것이다.

어떤 사람들(주로 법을 아는 사람들)은 어찌됐든 ‘석궁을 들고 판사를 찾아간 것 자체가 범죄 아니냐’고 주장한다. 하지만 ‘석궁 사건’이 터지고 사법부가 법원장 회의까지 열어 “법치주의에 도전하는 테러”로 규정하던 당시에도 “나도 석궁을 들고 싶다”고 말하던 사람이 많았다. 그만큼 사법 권력에 대한 불신은 우리 사회에 뿌리 깊이 박혀 있다.

뿌리 깊은 불신

영화에서 김 교수는 “법은 아름다다”고 말하고, 변호사는 “법은 쓰레기”라고 말하는 대목은 인상적이었다. 무엇이 맞을까? 얼마 전 재판에 갔다가 한 인권변호사가 “국가보안법은 쓰레기 악법이지만 형사소송법은 아름다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

인신 구속 절차를 규정해 놓은 형사소송법은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나름 정교하게 짜여 있다. 오랜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수많은 민중이 피를 흘린 대가다. 하지만 법을 집행하는 권력자들은 악법은 철두철미하게 적용하면서, 투쟁의 성과가 반영된 법의 좋은 내용은 따르지 않는다. 게다가 그 대상자의 부와 권력 차이에 따라 법 적용이 확연하게 갈리기 때문에 ‘유전 무죄, 무전 유죄’라는 유행어가 진리처럼 굳어졌다.

이것은 ‘석궁 사건’ 재판 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결정적 증거인 ‘부러진 화살’이 사라졌고, 의문 투성이인 피해자 옷가지의 혈흔도 감정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의의를 제기하는 김 교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석궁 사건’뿐이겠는가?

얼마 전 나는 국가보안법 ‘왕재산 사건’ 1심 공판을 방청하러 갔다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다.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피의자’들의 집과 사무실에 들이닥쳐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까지 불법적으로 싹쓸이 압수해 갔는데, 검찰은 이런 자료들을 짜깁기해서 ‘반국가단체 설립’ 혐의를 입증하려 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증거 능력이 없다’는 반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검찰의 손을 들어 줬다.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 훼손죄’로 정봉주 전 의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재판부는 ‘허위 사실’ 여부 입증 책임을 피고인에게 돌리는 코미디를 연출했다. 그 사건의 재판장이 ‘석궁 사건’의 ‘피해자’인 박홍우 판사라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평범한 사람들은 권위적이고 오만하기 짝이 없는 사법부의 흑막 뒤에서 벌어지는 구린내 나는 일들을 알지 못한다. 그저 상식을 벗어난 판결이 나올 때마다, 분노를 삼킬 뿐이다. ‘법률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결한다’는 사법부가 이렇진대 정권의 수족 노릇하는 검찰이나 경찰 같은 수사기관들의 공정성은 말할 것도 없다. 선출 절차도 없이 권력을 틀어쥔 법조 관료들이 권력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에게 무조건 복종을 강요하는 실태는 민주주의를 웃음거리로 만든다.

만일 지배자가 장막 뒤에서 줄을 당기고 있는 걸 대중이 알게 되면 더는 ‘법의 정의’를 신뢰하지 않고 지배자들을 향해 분노의 화살을 쏘아댈 것이다.

거세게 불고 있는 ‘<부러진 화살> 현상’은 정당성이 무너진 사법 권력의 현주소를 보여 준다. 3법부(입법, 행정, 사법)가 사실은 한 몸인데다 그 뒤엔 거대한 자본이 버티고 서서 이를 조종하고, ‘권력의 감시자’라는 언론이 이를 방조하는 모습이 갈수록 뚜렷하게 드러나는 현실에서, 법관선출제든, ‘국민참여재판’의 확대든 사법 권력의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중의 요구는 더욱 거세질 수밖에 없다. <부러진 화살>로 드러난 민심은 그걸 요구한다.



국가 살인을 정당화한 사법 권력. 용산 참사 3년이 지났지만 강제 진압의 책임자들은 오간 데 없고, 철거민 일곱 명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다.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보기

자본주의와 언론

이명박 정부 하에서 벌어진 언론 장악과정은 자본주의에서 권력자들이 언론을 어떻게 길들이려 하는지 여실히 보여 줬다.

권력자들이 이토록 언론을 장악하려는 이유는 한 줄밖에 안 되는 권력자들이 다수를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해서다. 자본주의는 소수의 자본가들이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통제하며 나머지 압도 다수를 착취함으로써 굴러간다.

이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경찰력 등을 통한 물리적 통제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대중이 자본주의에 대한 의심의 눈길을 거두고 이 체제를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것으로 여기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자본주의의 권력자들은 언론을 활용한다.

언론은 기성 체제를 옹호하고 일상적으로 소수자들에 대한 온갖 차별과 편견을 부추김으로써 체제에 맞선 단결을 가로막는 구실을 하곤 한다. 여성의 몸을 대상화하고, 이주자들에 대한 편견을 강화하며, 노동자 투쟁을 경제를 망치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보도한다. 그뿐 아니라, 온갖 선정적 스캔들, 범죄, 스포츠 기사들을 부각하며 이 체제의 진정한 문제점을 가리고, 자본주의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돼 있는지 보이지 못하게 한다.

뉴스 보도뿐 아니라 토론 프로그램의 출연자 선정, 연속극의 줄거리 등도 사람들의 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언론의 의도는

무엇을 보도하는지뿐 아니라 무엇을 보도하지 않는지에서도 드러난다. 이것은 자본주의에서 언론을 소유·통제하는 것은 막대한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나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이다. 직접 소유·통제하지 않더라도 기업 광고나 정부 보조금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다.

광고

칼 마르크스는 1845년에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이런 현상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설명한 바 있다. “어떤 시대에나 지배계급의 사상이 지배적인 사상이다. 즉, 사회를 지배하는 물질적 세력인 지배계급이 그 사회를 지배하는 정신적 세력이

기도 하다. 물질적 생산수단을 통제하는 계급이 정신적 생산수단도 통제한다.”

하지만 언론의 영향력이 전지전능한 것은 아니다. 시청률이 가장 높은 KBS와 MBC가 한미FTA 반대 시위를 외면하고 정권 비호 방송으로 전락했지만 이명박 정권의 레임덕도, 사람들의 저항도 막을 수 없었다.

경제 위기 등으로 지배 이데올로기가 허물어질 때 언론의 영향력은 약해진다. 무엇보다 언론이 집단적 투쟁 속에서 대중이 직접 행동하고 경험한 것에 배치되는 거짓말을 할 때, 대중은 언론의 본질을 꿰뚫어 보고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MBC 노동자들의 파업 같은 언론 노동자들의 투쟁도 중요하다. 이것은 방

송이 권력에 종속되지 않도록 할 중요한 힘이다. 또, 언론 노동자들이 방송을 멈추고 정권에 도전하는 모습은 다른 부문의 노동자들도 이명박 정부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어넣어 준다.

한편, 언론의 지배력은 단순히 몇몇 언론사 사주가 만든 것이 아니라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가 계급의 지배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대안적 세계관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그것을 실현시킬 투쟁을 선동하고, 사람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고, 노동자들이 단결할 수 있도록 가교를 놓아 줄 변혁적 언론이 필요하다. <레프트 21>은 바로 이런 구실을 하고자 한다.

최미진



《글로벌 슬럼프》서평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은 무엇인가

《글로벌 슬럼프》는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마르크스주의자 데이비드 맥넬리 교수가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원인과 저항을 다룬 책이다.

맥넬리는 번역자인 강수돌 교수와 한 인터뷰에서 두 가지 계기로 이 책을 썼다고 밝혔다.

첫째는 “가난한 사람을 탓”하는 지배자들과 주류 경제학을 반박하려고다. 예를 들어 보수 언론은 그리스 위기를 설명할 때도 그리스 노동자들이 높은 임금과 복지 혜택 때문에 망한 것이라며 호도한다. 맥넬리는 저들의 거짓을 폭로한다.

“그리스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8백3유로(약 1천63달러)인데, 이것은 놀랍게도 아일랜드의 월 최저소득 1천3백 유로나 네덜란드의 월 최저소득 1천4백 유로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 책은 이런 거짓말과 고문전가를 폭로하며, 저항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곳곳에 담고 있다.

맥넬리가 이 책을 쓴 둘째 계기는 “금융권만 잘 규제하면 다 해결될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주장에 맞서 문제의 원인이 자본주의의 본질에 있다는 것을 밝히려는 것이다.

맥넬리 교수는 마르크스가 이미 1860년대에 “체제의 전반적인 위기가 앞뿔 보면… 단순히 금융 및 화폐 공황인 것처럼 보이게” 된다고 썼다고 지적한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은 이번 경제 위기의 원인을 단지 금융의 문제로 설명하는 데 그친다. 문제의 원인을 금융으로 보다 보면 대안도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꾸기보다는 금융을 개혁하는 선에 머무르고 만다.

그러나 맥넬리 교수는 “글로벌 슬럼프의 근본적인 원인은 단순한 금융 불안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전체의 이윤을 저하”라고 설명한다. 그는 착취와 경쟁, 위기를 낳는 자본주의의 동학을 분석한다.

이처럼 자본주의가 자본주의 자체의 한계를 지적하며 체제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 책의 분명한 장점이다.

그러나 이 책은 몇 가지 분석에서 타당하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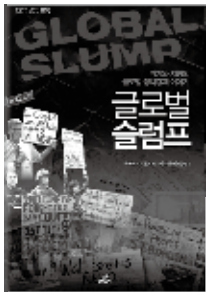
첫째는 이윤율이 저하하는 원인에 관한 것이다.

맥넬리 교수는 이윤율이 저하하는 원인으로 “과잉 축적”과 “기계화가 낳는 모순”을 꼽는다. “기계화가 낳는 모순”을 지적하는 것은 옳다. 이는 기계에 투자하



사진 출처 Tom Kruse

2000년 4월 볼리비아 코차밤바에서 벌어진 물 사유화 반대 시위 이 투쟁은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 광범한 연대를 건설해 승리할 수 있었다. 맥넬리는 “글로벌 슬럼프” 시대에 이런 경험을 배워서 투쟁을 확대하고자 주장한다.



《글로벌 슬럼프》
데이비드 맥넬리 지음 |
강수돌·김낙준 옮김 |
그린비 | 392쪽 |
1만7천 원

는 비율이 늘어날수록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고도화해 이윤율이 줄어드는 경향이 생긴다는 것이다. 실제로 기술 생산성이 급속히 늘어나는 컴퓨터 같은 상품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면 노동절약적인 기술 발전이 상품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과잉축적, 즉 과잉생산을 이윤율이 하락하는 원인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만약 이윤율이 높다면 자본가는 투자를 늘릴 것이고, 이를 통해 모든 생산물은 소비될 것이다. 반대로 이윤율이 낮다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자본이 남아도는 과잉생산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과잉생산은 위기의 “원인이라기보다는 위기의 징후”(조셉 추나라)로 보는 것이 옳다.

둘째는 1982~2007년 신자유주의 시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크리스 하먼은 신자유주의 시대가 “어느

정도 이윤율 회복”의 기미가 있었지만 “자본주의를 장기 호황의 장기적 패턴으로 되돌리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하고 썼다. 로버트 브레너도 1973년 이후 세계 경제를 진단하면서 “장기 침체”로 정의했다.

그런데 맥넬리는 이런 규정에 반대해 1982년부터 2007년이 신자유주의 팽창기라고 주장한다.

맥넬리는 “1982년 이래 25년간… 세계 경제는 그 규모 면에서 3배나 증대”했고, “미국의 이윤율이 2배로 증가했다” 하고 썼다. 그러나 이윤율의 장기적인 추세를 보려면 이윤율의 등락 속에서도 평균적 수치를 계산해내야 한다. 그런데 맥넬리가 이윤율이 가장 낮을 때와 가장 높을 때를 비교해서 이윤율이 크게 올랐다고 말하는 것은 상황을 왜곡하는 분석이다.

장기 침체

신자유주의 시기를 호황으로 보는 맥넬리의 관점은 금융화를 분석하는 데 약점으로 작용한다. 금융화가 급속하게 벌어진 원인에 대한 그의 분석과 설명은 충분치 않다. 신자유주의 시기를 실질적인 경기 팽창기라고 보다 보니 그 시기에 낮은 이윤율 때문에 자본가들이 생산적 투자보다 금융 투기로 몰렸다는 점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다.

맥넬리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착취

를 강화한 것과 함께, 동아시아가 새로운 축적의 중심지로 떠오르면서 세계경제 성장을 이끌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80년대 동아시아에 대한 외국인 직접 투자는 다른 주요 OECD 국가에 대한 투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는 사실을 볼 때 맥넬리의 주장은 근거가 불충분하다.

맥넬리가 위기에 맞선 저항을 설명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영감을 주는 사례가 많다.

볼리비아에서는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 물 사유화 반대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멕시코 오아하카에서는 투쟁이 발전해 민중의회가 한 도시를 운영하는 상황으로까지 나아갔다.

이런 투쟁들을 소개하며 그는 노동운동이 “경제적 노조주의”가 아닌 대중 참여형 “사회운동적 노조주의”로 가야 한다고 방향을 제시한다. 노동자들이 협소한 시각에서 벗어나 사회운동에 주도적으로 참가해 광범한 연대를 이끌어야 한다는 방향은 옳다.

다만 맥넬리의 주장에는 “백인 노동계급 대중의 일상 속에는 대개 인종주의나 애국주의, 권위에 대한 순응과 존중 등이 깊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저항에 나설 가능성이 적다는 생각도 반영돼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의 저항을 다룰 때 이주노동자 투쟁을 중심으로 다루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최근 영국에서 주요 조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벌일 것에서 보듯 이런 생각은 다소 일면적이다.

맥넬리는 “사회혁명이 목표라면, 개혁을 위한 투쟁은 그 수단이다”는 폴린 바커의 말을 인용하며 개혁과 혁명을 변증법적으로 연결시킨다. 그는 투쟁 속에서 “새로운 연대전선”을 형성해야 한다고 말하며 그리스의 좌파 연합인 시리자 등을 예로 든다. 투쟁 속에서 반자본주의 좌파들의 연대 세력을 건설해야 한다는 강조는 올바른 것이다.

그런데 맥넬리는 동시에 독자적인 혁명정당을 건설할 필요성은 말하지 않는다. 러시아 혁명을 이끈 혁명정당 볼셰비키를 “좌파연합세력”이라고 왜곡되게 표현하는 데서도 반자본주의 세력의 연대전선을 건설하는 방식으로 변혁조직을 건설할 수 있다는 관점이 드러난다.

그러나 대중 운동의 성장은 좌파를 성장시키기도 하지만 투쟁의 방향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 속에 놓이게도 만든다. 그런 상황에서 운동을 성장시키려면 혁명적 정치를 바탕으로 전략과 전술을 제시하며 조직할 수 있는 혁명 정당의 구실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책이 저항의 영감을 주는 일을 만한 책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만 몇 가지 분석상의 오류를 비판적으로 읽는다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정선영

‘핵없는 세상을 위한 의사회’(반핵의사회) 출범

핵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최규진 반핵의사회 연대사업국장

지난 1월 14~15일 요코하마에서 탈핵 세계회의가 열렸다. 행사장 주변은 1만명에 가까운 사람들로 붐볐다.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도 많았다.

일본 핵발전소 54기 중 49기가 정기검사나 사고·고장 등으로 현재 정지 상태다. 나머지 다섯 기도 4월 말이면 모두 정기검사에 들어가 가동을 멈춘다. 점검을 마친 뒤 재가동할 때는 해당 지자체의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서 현재 일본에서는 핵발전소 재가동 반대가 중요한 사회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요코하마 탈핵 세계회의에서도 이 운동을 건설하는 데 많은 관심이 쏠렸다.

탈핵세계회의의 참가자들은 사실을 은폐하고 후쿠시마 사태의 주범들을 변호하며

피해자 대책과 탈핵 정책 수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이 쏟아질 때마다 큰 박수로 호응했다. 대회장 밖에서 참가자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한 두 번의 행진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5천여 명이 요코하마 시내를 돌며 탈핵을 요구했다. 어린 아이부터 노인들까지 “겐바츠 이라나이, 코도모오 마모루”(핵발전소는 필요 없다. 우리의 아이들을 지켜내자!)라는 구호를 소리 높여 외쳤다.

주최 측이 청중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 않고 집회나 행진 등을 조직하지 않는 등 기층의 반핵 열기를 담아내는데 미흡한 점은 아쉬웠다.

요코하마 탈핵세계회의가 열린 지 보름 뒤인 1월 29일 서울에서는 반핵의사회 출범식이 열렸다. 탈핵 여론이 커지

자 보수진영에서 어용학자들을 내세워 소량의 방사선은 인체에 이롭다는 ‘호메시스 이론’으로 물타기를 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건강 문제는 가장 민감한 대중적 쟁점이다.

따라서 방사능의 위험성을 의학적으로 경고하는 반핵의사회의 활동은 탈핵 운동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반핵 의사회에는 역학자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어 상계동 “방사능 아스팔트” 조사, 경주 방폐장 안정성 검증, 식품안전 기준 검토 등 다양한 조사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탈핵 운동의 확대를 위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사태 발생 당시부터 지금까지 국민에게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또 도쿄전력에는 약 14조 원을 퍼주고, 전기요금을 인상해 결국 국민

에게 복구비용을 떠넘기고 있다. 일본 정부는 자기들이 누구 편인지 보여 주고 있다.

피폭자이면서 다른 피폭자들의 치료에 평생을 바치신 히다 슌타로(의사, 93세)는 요코하마 탈핵세계회의 개막 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 일본에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멀리 도망가라. 그리고 최대한 오염되지 않는 물과 식품을 섭취해라. 저는 이 두 가지밖에 해 줄 말이 없습니다.”

반핵의사회 창립기념 토론회 초청연사인 키카마 하지메 역시 의사로서 피폭자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암으로 진행되는 데 영향을 끼치는 요소들을 최대한 차단해 주는 것”밖에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피폭된 이상 치유의 개념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는 3월 서울에서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린다. ‘핵테러 방지’를 기조로 삼은 핵안보정상회의는 북한과 이란의 핵 개발을 빌미로 동아시아와 중동에서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오바마의 계획에서 시작된 회의다. 또 후쿠시마 사고로 제동이 걸린 핵발전 ‘르네상스’를 이어가려는 시도가 맞물린 장이다.

3월 11일이면 후쿠시마 사태 1주기를 맞는다. 3월 한 달은 핵 때문에 생존의 위협을 당하는 것 말고는 얻을 게 없는 평범한 민중의 미래를 위해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나는 히다 선생 같이 훌륭한 피폭전문 치료가가 되고 싶지 않다. “핵이 없는 곳으로 최대한 멀리 도망가고, 최대한 안전한 음식을 먹으라”가 내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처방으로 만들고 싶지 않다. 핵은 없어야 하고 없앨 수 있다.

소식·보고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2월 13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Report@left21.com

민주노총의 8월 파업 결의

지금부터 투쟁을 썩어나가야 한다

1월 31일 열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모든 것을 걸고 투쟁을 조직하겠다”며 8월 정치 파업을 제안했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노조법 개정, 파견법 폐지, 노동 시간 단축 및 일자리 창출 특별법 제정 등을 위해 산별·연맹의 임금 단체협약 투쟁과 결합해 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3천인 이상 규모의 작업장 대표들이 참가하는 ‘총파업 연석회의’도 구성키로 했다.

민주노총 지도부가 ‘정치 파업’ 계획을 제출하며 투쟁을 호소한 것을 환영한다. 정권의 위기가 대중의 자신감을 자극하고 기층 노동자들의 자신감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허황된 계획도 아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정치방침 문제가 논의되지 못했다’는 점만 두드러지게 비판하는 일각의 평가는 적절치 않다. 활동가들도 정치방침을 둘러싼 분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진보 다원주의’를 제기하며 투쟁 방향과 계획을 제시하는 데 주력해야 했다.

그런데, 지금 진정 중요한 점은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파업 계획을 실질화하는 것이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지난해 초에도 ‘최저임금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 민주노총도 아니다’ 하며 생활임금 쟁취 투쟁을 결의했지만, 결과는 궤차되었다.

실질화

이 때문에 대의원들 사이에선 그것이 실질적인 계획인지, 과연 가능할지에 관한 물음이 제기되기도 했다. “뺑파업” 선언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동안 대중투쟁보다는 야권연대를 통한 협상에 기대온 것이 이런 불신을 자초했음을 반성적으로 되돌아 봐야 한다. 이 속에서 산별·연맹들의 시기 집중 투쟁도 대개 힘을 받지 못한 채 각계 투쟁으로 마무리되기 일쑤였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전국적 정치 파업을 성사시켜 투쟁을 통해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 줘야 한다. 8월 파업을 4월 총선 이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이나 야권연대 후보의 승리를 위한 종속 변수로만 여겨서는 기층의 파업 열기를 모아내기 어려울 수 있다.

더구나 파업은 아무 때나 꺼내 쓸 수 있는 주머니 칼이 아니므로, 지금부터 시작된 투쟁들에 힘을 모아 발전시키며 경제적 요구와 정치적 요구를 결합시켜 나가야 한다.

KTX 민영화 반대 투쟁, 노동조건 후퇴없는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쟁, 3·8여성 비정규직 투쟁, 쌍용차 투쟁 등에 더 많은 노조들을 동참시키고 힘과 근육을 길러야 한다. 함께 뭉치면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만들어야 한다.

현장의 활동가들은 이런 투쟁의 과제를 제시하며 투쟁의 동력을 만드는 데 앞장서야 한다.

조명지

공공운수노조

여성 비정규직 공동 투쟁이 건설되고 있다!

심신혜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부지부장

간접 고용 노동자들은 매년 초가 늘 불안하다. 재계약 시기,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대한 걱정이 노동자들을 짓누른다.

그런데 최근 이 노동자들 중 일부가 달라지고 있다. 지난해 매우 강건했던 청소 노동자들의 집단 투쟁이 대표적이다.

반값게도, 공공운수노조는 이 투쟁이 보여 준 가능성을 넓히려는 취지에서 ‘생활임금 쟁취를 위한 여성 비정규직 공동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 투쟁이 상반기 청소 노동자 투쟁과 결합되지 못한 채, 일시적 캠페인으로만 제한된 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말이다.

그래서 공공운수노조는 ‘3·8 여성의 날’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투쟁을 시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정 최저임금이 결정되는 6월까지 투쟁을 넓혀가기로 했다.

특히 지난해처럼 대학 청소 노동자들이 파업에 나선다면, 투쟁에 구심기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대학 청소 노동자들은 지금 두 번째 집단 교섭을 벌이며 공동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49일간의 점거파업으로 해고를 철회시키고 임금을 인상시킨 홍익대 투쟁, 이후 이어진 고려대·이화여대·연세대·고려대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은 ‘더는 유령으로 살고 싶지 않다’는 당당한 선언이었다. 이 투쟁이 우리 사회에 가져온 파장은 매우 크다. 생활임금의 필요성을 전면 제기하며,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인



지난해 통쾌한 승리를 거둔 대학 청소 노동자 공동 파업

상률을 따내는 패거리를 이뤘기 때문이다.

올해 집단교섭에는 공동 파업을 벌인 네 곳뿐 아니라, 홍익대와 경희대 노동자들도 합류했다. 사측은 올해도 임금 동결을 고집하며, 친사측 복수 노조 결성으로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서경지부는 교섭으로 안 되면 정의행위에 돌입하려고 한다.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악법 때문에 파업 자체가 ‘불법’이지만, 필요하다면 이를 감수하고라도 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사측의 탄압이 기승을 부릴수록 단호히 공동 파업에 돌입해 실질적인 힘을 보여 줘야 한다.

올해는 이런 투쟁 대열에 학교 비정규직·간병·요양·보육 노동자들도 함께할 계획이다. 함께 싸우며 ‘3·8 여성대회’ 때 더 큰 투쟁을 선포할 것이다.

보육 교사

임금 동결 반대 투쟁에 나서다

1월 13일, 보건복지부가 보육 교사 임금 동결 지침을 발표했다. 정부는 2009~10년에도 임금을 동결했고, 2011년에는 물가 인상을보다도 1퍼센트 낮은 3퍼센트만 인상했다. 사실상 실질 임금이 하락한 것이다.

이번에 정부는 총선을 앞두고 보육 예산을 증액했다고 생색냈지만, 보육 교사에게는 또다시 희생만 강요했다. 정부는 보육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보육 교사는 보육 정책에서 항상 후순위로 밀렸다.

한국 사회에서 보육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 지 오래다. 보육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려면 정부·운영자·학부모·보육

교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하고, 마땅히 노동자들의 처우도 높아져야 한다.

그러나 우리 보육 교사들은 쉬는 시간 없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에 시달린다. 지금과 같은 급여 수준으로는 보육 교사들이 사명감만 갖고 일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육 교사들이 자존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현실적인 급여 보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임금 동결에 반대하는 보육 교직원 서명을 조직했다. 무려 1만2천3백40명이 참가했다. 노조는 이런 분노와 열망을 받아 안아 1월 30일에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지만, 그들은 “참 아달라”는 말만 했다.

우리는 더는 보육 노동자들의 노동력을

이런 투쟁에 더 많은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뭉친다면 금상첨화일 것이다. 전국학교비정규직 단일노조, 여성연맹, 전국여성노조 등이 공동으로 싸운다면 투쟁의 판을 훨씬 더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도 이 투쟁에 연대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지배자들은 투쟁을 통해 만들어지는 연대를 뽑아버려야 할 ‘독초’로 여기겠지만, 그럴수록 우리에게는 요구를 쟁취하고 사회를 변혁시킬 ‘약초’가 될 것이다.

연초부터 공공부문 비정규직 해고가 잇따랐지만, 반값게도 최근 인천세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해고를 당했다가 단호한 투쟁과 연대로 승리를 거뒀다.

이런 투쟁과 승리를 대세로 만들자. 공동 투쟁을 채비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아낌없는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법원 청소 노동자

몰상식에 맞선 연대와 통쾌한 승리

지난해 12월 31일에 해고됐던 서울고등법원 청소 노동자들이 전원 복직이라는 승리를 거뒀다.

서울고등법원 측은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청소 업무를 하던 민주노총 소속 여성 노동자 여섯 명을 해고했다. 노동자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오후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해고 사유도 가관이었다. “화장실에 휴지가 떨어졌는데 모 과장이 제때 교체하지 않았다고 항의한 것”, “관절이 안 좋아 걸어 다니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은 것”이 이들이 하루 아침에 직장에서 쫓겨난 이유였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바로 이 여성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조합원이고, 노조 활동을 했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은 해고에 맞서 투쟁을 시작했다. 그리고 평소 유대 관계가 있는 공무원노조 법원본부에 연대를 호소했다.

백기

우리는 바로 부당 해고 철회를 위해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연맹이 주최한 집회에 함께 참가했고, 대법원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1인 시위도 지속했다.

법원 노동자들은 ‘서로 덕담을 주고받아야 모자라는 연말연시에, 그것도 법원에서, 어떻게 이런 부당해고가 있을 수 있느냐’며 청소 노동자들을 응원했다.

언론들도 ‘공정해야 할 법원이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을 비판했다.

결국 법원 행정처장은 백기를 들었다. 노동자들은 전원 현장에 복귀했다.

이것은 법원 노동자들에게도 반가운 소식이었다. 조합원들은 노조가 “약자의 편에서 함께한 것은 정말 잘한 일”이라고 칭찬했다.

법원본부는 청소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싸울 때부터 함께했는데, 이번에 우리는 더 돈독해졌다. 앞으로도 연대를 더 굳건히 해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함께 싸워 나가야 한다.

양운석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지역본부부장

부산대 | 기성회비 폐지, 등록금 대폭 인하, 교육재정 확충, 교직원 지위 보장을 위한

연대 투쟁이 필요하다

1월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국립대 학생 4천2백19명이 각 대학 기성회를 상대로 낸 부당 이득 반환청구소송에서 “대학이 징수한 기성회비는 부당 이득”이므로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국·공립대학 본부는 편법으로 교액의 기성회비를 학생들에게 부과했다. 부산대도 2011년 등록금의 81퍼센트가 기성회비였다.

이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고등교육 예산을 충분히 배정하지 않은 정부에 있다. 그러나 각 대학 본부들도 정부 교육정책에 부응하며 수십 년간 기성회비를 인상한 장본인들이다.

이런 부당한 기성회비는 폐지돼야 하고, 등록금도 대폭 인하돼야 한다.

그런데 교과부와 대학 본부는 “기성회비 용도 불법 시정”에만 초점을 맞춰 교수·교직원을 구조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기성회비 부당 징수는 교수·교직원의 탓이 아니다.

특히, 기성회가 고용한 교직원들은 사실상 대학 공무원과 같은 일을 하고 있으므로, 기성회비가 폐지되면 국가가 책임지고 공무원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산대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 학생위원들이 “등록금 인하는 이미 책정된 교직원 급여보조 경비 삭감에서 이

루어져야 한다”고 한 것은 실수다. 이런 입장은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함께 싸워야 할 교직원들과 학생들의 분열을 낳을 수 있다.

판결 후 한국대학생연합은 기성회비 반환 소송을 확대하고 “전국 국·공립대가 연합해 부당한 기성회비를 전액 반환 받겠다”고 밝혔다.

기성회비 반환 소송과 함께, 대부분 기성회비인 등록금의 인하를 위한 투쟁도 필요하다.

부산대 학교본부는 등록금을 겨우 5퍼센트 인하하겠다고 한다. 판결 후 부산대 총학생회는 등심위 재개최와 등록금 재논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총장은 ‘등록금 인

하율이 이미 정해졌다’며 재논의조차 거절했다.

총학생회는 협상 기구인 등심위에만 기대려 하지 말고, 기성회비의 부당함을 알리고 본부에 항의하는 대중적 학생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그리고 다른 국립대 및 사립대 학생들과 연대해 정부 교육재정 확충을 요구해야 한다.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시행, 기성회비 반환청구소송 소송에서 보듯, 등록금 문제 해결에 대한 지지가 높다. 지금이야말로 학생들이 목소리를 내고 싸울 때다.

박연오 부산대 학생

장기 자랑 강요, 서울대 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는 대학 병원 간호사다. 최근 서울대병원 송년회에서 간호사들이 장기 자랑을 강요받고, 심지어 심사위원들이 “옷을 벗었으면 1등 줬을” 것이라며 간호사를 성적 대상화한 것이 이슈가 됐다. 그런데 이는 서울대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다.

간호사들은 대부분 적어도 한 번씩은 장기 자랑을 경험한다.

나 역시 같은 병동의 간호사들과 장기 자랑을 한 적이 있다. 남자들이 없었고 선정적인 옷을 입고 춤을 춘 것은 아니었지만, 자정에 근무가 끝나고 도 새벽까지 남아서 연습하는 것이 정말 화났다.

다른 대학 병원에서 근무했던 한 선배도 연말 송년 모임에서 장기 자랑을 해야 했다. 신규 간호사 7명이 매일 모여 춤과 노래를 연습했는데, 3교대 하는 간호사들의 처지 때문에 무려 한 달이나 연습해야 했다. 신입이라 일이 익숙지 않아 고달픈 데다가 휴식 시간까지 뺏겨가며 장기 자랑 연습을 하자니 그 피곤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장기 자랑 등수에 따라 상금을 준다고 하니 선배들은 신규 간호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 1등을 하라고 닥달했다. 결국 자극적인 소재를 선택하고 짧은 치마를 입고 가수들의 춤을 흉내 낼 수밖에 없었다.

대학을 졸업한 지 얼마 안 된 신입 간호사들은 여러 번 되뇌었다. “춤추고 노래하려고 간호사가 된 게 아닌데”, “전문직의 품위를 강조하더니 이게 뭐야.”

그 한 달의 경험은 간호사이자 여성으로서의 자존감에 생채기를 남겼다. 이 선배는 신규 간호사 생활이 끝난



신아라

고달픈 3교대 근무에 의사 비위 맞추는 장기 자랑까지? 간호사의 자존감을 지키고 싶다.

뒤에 신경외과 전공의 1년차 입국 축하식에 참가했는데, 이때 역시 신규 간호사들은 장기 자랑을 강요 받았다. 또다시 노출이 심한 의상에 자극적인 춤이 펼쳐졌다.

선배는 여러 생각에 괴로웠다. 의사들의 축제에 여성 간호사들이 장기 자랑을 한다는 게 분노스러웠고, 여성을 성적 대상화하는 모습에 수치심을 느꼈다. 장기 자랑하려고 휴식시간까지 쪼개가며 연습했을 신규 간호사들을 생각하니 안쓰럽기도 했다.

상처 입은 자존감

선배는 노동조합에 찾아가 이 사건을 고발했다. 별로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시킨대로 하는 그 간호사들이 미쳤지!” 하며 간호사 개인을 문제 삼는 사람도 있었다.

다행히 노동조합의 몇몇 간부가 올바르게 주장해 간호부장에게 항의하고 대자보를 부착한 후에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낼 수 있었다.

장기 자랑뿐 아니라 회식 자리에서도 비슷한 일이 비일비재하다. 노래방에 가면 교수들과 춤을 추라는 은근한 압력과 재미있는 퍼포먼스를 보여달라는 요구 등 때문에 나는 회식 자리에 참석하는 것을 꺼리게 된다.

황당하게도 그런 압력을 넣는 사람은 같은 간호사이자 여성인 수간호사다. 그 수간호사는 항상 우리에게 복장, 화장, 태도, 말투를 지적하며 ‘전문적인 간호사’의 자세 운운한다. 교수들 비위를 맞추며 함께 춤추는 것이 그가 말하는 ‘간호사의 전문성’인가?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간호사들은 자신의 직업에 대한 자존감이 바닥에 떨어진다. 직장 동료들이 회포를 풀고 단합하는 방법이 이런 것밖에 없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노동조합이 적극 나섰으면 한다. 각 병원 노동조합만이 아니라 보건의료노조와 공공노조 의료연대도 함께 연대해야 한다.

유혜린

시리아 민중 항쟁 지지 기사는 친미적 관점 아닌가요?

〈레프트21〉 73호에 실린 ‘정부를 위협하는 시리아 민중 항쟁’은 시리아의 수니파 이슬람교의 주장을 그대로 실은 듯한 기사입니다.

이것은 반자본주의나 반제국주의의 관점과도 다르고, [시리아 정부의 학살로] 매일 40명이 죽어 간다는 내용은 사실

미국의 언론 조작이지 현실과 다릅니다. 이 기사는 미국의 중동 정책을 찬성하는 내용과 수니파 이슬람주의자의 주장을 찬성하는 내용이 섞여 있는 듯합니다. 기사 내용에 대한 자세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익명의 독자

아사드 정권에 맞선 항쟁을 지지해야 합니다

위 편지의 필자는 시리아 정권에 맞선 민중 항쟁을 지지하는 것이 곧 친미, 친제국주의 입장이라고 여기는 듯하다. 시리아 정권이 미국과 사이가 좋지 않은 이른바 ‘반미’ 정권이라고 보고, 그에 맞선 투쟁이 오히려 미국에 도움을 준다고 여기는 것이다.

물론, 좌파는 시리아 민중항쟁에 서방이 개입하는 것에 반대해야 한다. 〈레프트21〉은 리비아 혁명에서 서방 제국주의 열강의 개입을 일관되게 반대했다. 서방국가들은 자신들이 리비아 혁명을 보호했다고 선전하지만 그들의 진정한 목적은 중동과 북아프리카에서 자신들이 누리던 지역 패권과 석유 이익 회복이다.

시리아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안보리에 “시리아 유혈사태 해결을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우리는 이런 위선적인 언사들과 미국과 서방의 제국주의적 개입에 단호히 반대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과 서방 제국주의 열강의 시리아 간섭에 대한 반대가 곧 시리아의 알아사드 정권 지지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껏 시리아를 지배해 온 바트당은 소련식 국가자본주의 모델을 도입하면서 소련의 지원을 받았고, 팔레스타인 해방운동의 언어를 차용했고, 반제국주의적 미사여구를 결합시켰다. 그리고 이 때문

에 이스라엘과의 긴장관계가 조성됐고, 시리아의 지배자들은 이런 대립을 활용해 국내 권력 기반을 강화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일관된 반제국주의 세력이 아니다.

그러나 소련 몰락 이후 지원이 끊길 위험에 처하자 시리아 국가는 걸프전을 지지하는 등 서방 열강과의 관계 개선에 나섰다.

이런 위선적인 정권들의 경제적 결론은 “자유시장경제의 도입”이었다. 그리고 이런 정책들은 아랍 민중들의 삶을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시리아의 “반제정권”은 서방 국가들의 투자를 촉진하는 법을 통과시켰고 시리아의 평범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어떠한 이익도 얻지 못했다.

따라서 자본주의와 제국주의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좌파들은 서방 제국주의의 개입과 이를 통해 혁명의 성과를 가로채려는 기회주의자들에게 일관되게 반대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삶을 되찾기 위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선 시리아 민중에게 지지를 보내야 한다.

시리아에서 반제국주의의 과제는 알아사드와 그의 사당개인 시리아 군부에 의해서는 결코 달성될 수 없다. 이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바로 혁명에 나선 시리아의 민중이다.

김소망

진보정당 후원 재판 최후진술

“내가 유죄면, 이 사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다”

진보정당 후원을 이유로 기소된 공무원 노동자가 최근 결심 재판에서 한 최후진술문을 보내 왔다.

이렇게 기소돼 법정에서 서게 될 줄 알았다면, 진보정당에 매달 1만 원이 아니라 10만 원쯤 낼 걸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 동안 낸 게 5백 만 원도 아니고 겨우 50만 원밖에 안 돼서 부끄럽습니다.

2005년 정치자금법이 개정된 이유는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를 원하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도록 해, 정치 참여와 기부를 활성화하고 정치자금의 안정적 조달과 투명성을 확보해 건전한 정치자금 운용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입니다.

민주노동당의 탄생은 민주노조 운동을 기반으로 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무상의료, 무상교육을 전면에 내세우며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10명을 배출하고, 13퍼센트를 득표했습니다.

노동운동과 무상의료·무상교육을 지지하는 사람이 그런 주장을 하는 정당이 잘 되라고 1만 원씩 보낸 게 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저처럼 하위직 공무원이 깨끗한 정치, 복지 확대를 바란 것이 죄가 된다면, 도대체 투표권은 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부는 진보정당 후원이 실정법인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투명성을 확보하며,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에 조금도 어긋나지 않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재판은 검찰이 매우 편파적이고 정치적으로 공소권을 남용하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에 돈을 낸 것은 태반이 무혐의 내사 종결이었고, 그나마 5백 만원 냈다고 기소한 교장은 선고유예였습니다.

만약 제가 유죄가 된다면, 그것은 지금의 이 체제가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증거일 뿐입니다. 국민은 안중에 없고 그저 1퍼센트만 대변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저를 비롯한 정치자금으로 기소된 모든 공무원과 교사는 무죄입니다.

양윤석 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서울지역본부부장



신아라

공무원·교사의 정치활동 자유를 요구하는 공무원 노동자들

지난호 기사를 읽고

〈레프트21〉 73호에 실린 ‘더 위험하고 불안한 세계를 낳을 제국주의 전략’ 기사가 지적한 것처럼, 경제 상황이 날로 위기로 치닫고 있는 시점에 미국의 방위비 분담액 증액 요구는 남한 지배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에 따라 늘어나게 될 남한의 구실과 세계 15위권의 무기 수출국으로서의 지위를 감안할 때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남한 지

배자들에게도 마냥 싫지만은 않은 문제일 것이다. 또한 이는 높아진 경제 위상에 걸맞게 세계 질서 재편에 더 많이 그리고 더 깊숙히 개입하고자 하는 남한 자본의 요구이기도 하다.

결국 기사도 지적했듯이, 미국의 새로운 국방 전략과 더불어 남한 지배자들의 미친 순위 역시 전 세계와 한반도에서 불안정과 긴장을 고조시키며 평범한 사람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으로 사회주의자들은 이에 반대해야 한다.

김기철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 토론회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다함께 서울 동부 공개토론회
무바라크 퇴진 1년, 이집트 혁명은 계속된다.
연사: 차승일 <마르크스21> 편집팀원
일시: 2월 9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여성능력개발원 3층 2강의실(건대입구역 6번 출구)
참가비: 3천 원(학생 2천 원) 문의: 070-6877-5533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99-13 3층 303호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west.atg@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2-6338-2395 jballet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jbforum>
서울 중구 인현동 27가 189-2 201호



MB씨의 ‘1퍼센트 방송 만들기’에 맞선

MBC 파업은 정당하다

1월 30일, MBC 노동자들이 김재철 사장의 퇴임을 요구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파업의 효과로 뉴스와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이미 마비되기 시작했고, 예능, 라디오 등도 결방률이 높아질 예정이다.

김재철은 정권의 MBC 장악을 위한 첨병으로 파견됐고, 그동안 뉴스는 정권의 입맛에 맞게 왜곡·편파 보도를 일삼았다. 핵심 보직은 친정권 인사들이 장악했고, 바른말 하는 기자와 PD 들은 징계를 받고 다른 부서로 쫓겨났다.

그래서 MBC 기자들은 한미FTA 반대 집회를 취재하러 갔다가 ‘나가라’는 냉대를 받고 돌아오기 일쑤였다. 이런 경험을 겪은 기자들은 뉴스를 바꾸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

파업은 유리한 조건에서 시작하고 있다. MBC 장악의 주범인 이명박은 견장을 수 없는 레임덕의 늪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의 방송 장악 우두머리인 최시중도 비리에 연루돼 자진 사퇴했다. ‘무한도전’ 못 봐도 좋으니 마음 놓고 파업하라는 지지의 목소리도 넘쳐나고 있다.

이런 좋은 조건을 이용해 이번에는 성과 있는 파업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지난 MBC 파업의 교훈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다.

지난 파업의 교훈

MBC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매해 파업을 했다. 2008년과 2009년 파업은 조중동에게 방송을 내 주는 언론악법에 반대해 벌여졌고 악법 처리를 두 번이나 연기시킨 바 있다.

하지만 김재철 사장 퇴진을 내건 2010년 파업은 아쉽게 패배했다. 당시에 노조는 39일 동안 파업했지만, ‘파업보다는 지방선거에 대한 올바른 보도에 주력하자’는 일부 친민주당 시민단체 지도자들의 압력을 노조 지도부가 수용하며 투쟁을 접고 말았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사기가 꺾였고, 이근행 전 위원



1월 30일 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MBC 노동자들 언론 노동자들의 단결된 행동으로 이명박의 언론 통제를 분쇄해야 한다.

장은 해고됐고, 조합원들은 무더기 징계를 받았다.

다행히도 정권의 심각한 레임덕 속에 MBC 노동자들은 투지를 조금씩 되찾고 있다. “김재철이 나가지 않는 한, ‘MB

씨의 MBC’라는 명에는 극복할 수 없다”(MBC노조 정영하 위원장)는 사실을 큰 뱃가를 치르며 깨달은 만큼,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이 파업이 단지 MBC 노사만의 문제

가 아니라 정권의 언론 장악에 맞서는 정치 투쟁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진보진영의 연대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연대단체들의 힘을 모으는 일정

언론을 ‘1퍼센트의 헛바닥’으로 만들어 온 이명박

이명박 정권은 집권 초부터 언론을 장악·통제하려고 온갖 무리수를 썼다. 경제 위기의 고통을 민중에게 전가하고 이 과정에서 빚어질 저항을 분쇄하려면 단지 몽둥이뿐 아니라, 조중동 같은 보수 언론을 강화하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게 필요했다.

이명박은 자신의 최측근 최시중을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명한 데 이어, KBS·MBC·YTN 등에 낙하산 사장을 임명했다.

광우병의 진실을 폭로한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고, 낙하산 사장에 반대해 투쟁한 YTN 노동자들을 해고하고 노조면 위원장을 구속했다.

KBS에서는 ‘시사투나잇’, ‘미디어포커스’ 등 시사 프로그램이 폐지됐고, 시사보도팀은 아예 해체됐다. 그리고 김미화·윤도현 등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출연자들을 숙아 내는 블랙리스트가 폭로됐다.

더 나아가 이명박 정권은 언론악법을 날치기 통과시켜, 아예 조중동과 재벌들이 방송까지 진출할 수 있게 길을 터 주고 이들에 유리한 채널 선정, 광고 수주 지원 등 온갖 특혜를 줬다.

그러면서 언론·방송에서 진실과 정의는 사라지고 정권과 자본에 굴종하는 프로그램들이 그 자리를 채웠다.

예컨대 MBC는 한미FTA 날치기 직후

에 ‘FTA로 소비자가 받을 혜택’을 집중 보도했다. KBS는 4대강 사업 완공식을 생중계하며 이명박의 ‘삼철’을 홍보했다.

이처럼 이명박 정권은 계획한 대로 주요 언론·방송을 장악하고 논조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조중동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경화하기는커녕, 이명박 정권은 갈수록 설 자리가 좁아졌다. 전반적인 ‘좌클릭’ 현상 속에 한나라당마저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주요 정책 기조로 삼아야 할 지경이다. 정권을 비호하는 언론·방송사 들은 위상과 신뢰가 땅에 떨어져, 많은 사람들이 이들보다 SNS나 ‘나꼼수’를 더 신뢰한다.

이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노조와 MBC 지역 지부들, 시민사회단체들과 민주노총·진보정당들의 힘을 모아 집중 집회 등을 열고 MBC 사측과 그 배후에 있는 정권을 압박할 필요가 있다.

최근 언론노조와 MBC노조 서울지부, MBC노조 지역지부가 조중동 종편의 광고 영업 방식 문제(미디어랩 문제)를 둘러싸고 갈등을 겪었는데, 이런 갈등이 파업에 대한 연대를 건설하는 데 걸림돌이 되선 안 된다.

이명박 정권의 온갖 나쁜 언론 정책을 좌절시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금처럼 언론 노동자들이 집단적 행동에 나서는 것이고, 그래야 정권의 종편 퍼주기도 좌절시킬 힘이 생긴다. 따라서 언론 노동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 MBC 파업을 승리로 이끌고 이 힘을 바탕으로 올바른 미디어랩 설치 등 조중동 종편에 대한 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것이 옳다.

MBC 노조 파업이 승리해 1퍼센트만을 위한 방송을 만들려는 이명박의 시도를 보기 좋게 좌절시켜야 한다.

최미진

쌍용차 투쟁 1천 일

단결 투쟁으로 21번째 죽음은 막아야 한다

2009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쌍용차 파업이 일어난 지 1천 일이다 때가 되는 지금, “살인 해고를 철회하라”는 절규가 계속되고 있다.

1월 20일 사망한 강모 씨는 냉혹한 사측한테 두 번이나 해고되는 고통을 겪었다. 그는 2009년 회사에서 쫓겨난 뒤 계약직으로 재고용됐다가 최근 또다시 해고됐다. 두 번이나 폐휴지 취급을 당한 고인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리다 결국 심장마비로 야까운 목숨을 잃었다.

벌써 스무 번째 죽음이다. 이 비극적 죽음의 행렬은 2009년 대량해고 이후 계속됐다. 그리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쌍용차 출신’이라는 낙인을 안고 거리를 헤매며, 신용불량과 가정 파탄에 신음하며, 고용불안과 사측의 감시에 시달리며 죽음의 그림자와 만나고 있다.

2009년 쌍용차 파업은 경제 위기 고

통전가에 맞선 강력한 저항이었다. 쌍용차 대량해고를 구조조정의 시금석으로 여긴 지배자들은 포화를 집중했고, 노동자들은 77일간 목숨을 건 점거파업을 벌이며 맞섰다.

쌍용차 투쟁은 누가 경제 위기의 대가를 치를 것인지를 두고 계급 간 긴장과 갈등이 격화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또 다시 유로존발 위기가 세계경제를 깊은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는 지금, 쌍용차 파업의 교훈을 곱씹을 필요가 있다.

경제 위기

‘강경 투쟁은 쌍용차처럼 공멸한다’는 일각의 평가는 이 투쟁이 남긴 진정한 교훈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한다. 쌍용차 파업 이후에도 현대차 비정규직, KEC, 유성기업 등의 투쟁은 공장을 점거하며 강력하게 싸

울 때 진정으로 지배자들을 위협하며 투쟁의 초점을 형성할 수 있음을 보여 줬다. 반대로 노동자들이 공장 밖으로 밀려난 뒤에는 힘을 발휘하기가 어려웠다.

물론, 노동자들의 투쟁을 옹호할 사회적 연대도 중요하다. 깊어지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한 부문에 대한 공격은 전체 노동자에 대한 공격으로 연결되기 마련이다. 노동자 단결과 연대는 전체 노동계급의 이익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노동조합 투쟁도 정치적인 투쟁이 돼야 한다.

쌍용차 투쟁 당시에도 4·29 재보선 이후 끊는 민심이 노무현 사망 정국에서 거리의 정치 투쟁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이명박 정부를 상당히 압박하며 쌍용차 진압을 늦추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민주당 의존은 투쟁을

잠재우는 구실을 했고, 숨 고를 여유를 갖게 된 이명박 정부는 쌍용차 노동자들을 향해 살인 진압에 착수할 수 있었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전국적 힘을 집중해 연대를 건설하며, 정치 투쟁과 경제 투쟁을 결합시키며 투쟁을 발전시켜야 한다. 선거와 민주통합당과의 연대에만 매달리며 투쟁을 이에 종속시키며 주저하고 요구를 낮추려 해서는 안 된다.

지금 쌍용차 노동자들은 2월 15일 투쟁 1천 일을 앞두고 대규모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노동자들은 희망버스의 연대 투쟁에 고무받아 지난해 말부터 공장 앞에서 농성을 시작하며 투쟁을 재점화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말 혹한 속에 치러진 ‘1차 포위의 날’에 7백여 명이, 올해 1월 2차 행동에 3천여 명이 모이는 등 연대도 확대되고 있다. 조직 노동자들의 대

거 참여가 인상적이다.

2월 11~12일에는 투쟁 1천 일을 기념하는 대규모 집회가 예정돼 있다. 최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김영훈 위원장은 “5천 명 이상 동원하자”고 호소했다.

이명박 정부가 침몰하는 지금, 이런 연대 조직은 쌍용차 투쟁에 기회가 생기고 있음을 보여 준다.

따라서 활동가들은 이런 상황을 이용해 기층에서 노동자들의 자신감을 높이는 정치적 주장을 하며 단결과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김진석·박설

